



주간통일정세 2009-24(2009.06.08~06.14)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2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동부전선 보병사단 지휘부 시찰(6/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동부전선에 있는 북한군 제7보병사단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
 - 그는 시찰에서 “7사단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물리치는 조국해방전쟁(6.25전쟁)의 가열한 전투마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선인민군의 영웅적 기개를 떨친 위훈 많은 부대”라고 말하고 “전체 군인들이 혁명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 전취물을 더욱 튼튼히 지켜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보도
 - 이번 시찰엔 현철해, 리명수가 북한군 대장이 수행

나. 정치 관련

- **북한은 사회주의의 동방초소(6/14,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14일 ‘선군으로 정의와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시며’라는 제하 기사에서 “기승을 부리며 달려드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온갖 전횡을 제압하고 사회주의 동방초소를 굳건히 지켜가는 조선의 모습은 세계 평화 애호인민들의 동경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크지 않은 조선이 웬만한 나라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붕괴되었을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자기보다 몇십배나 덩치가 큰 제국주의 괴수와 그 연합세력의 압살공세를 굳력으로 단호히 제압하는 현대사의 기적을 창조한 비결”은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 “선군영도”라고 강조
- **北, 한미정상 확장억지력 명문화 비난(6/13,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13일 ‘자멸을 초래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미정상 회담에서 ‘핵확장억제전력 제공’을 명문화하면 “미국이 ‘핵우산’의 미명하에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남한에 더 많은 핵무기들을 서슴없이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조선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 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
- **北, 새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6/13, 북 외무성 성명)**
 - 북한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874호에 강력히 반발,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와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 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치를 선언

- 북한 외무성은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 배격하며 미국과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한다”며 “위임에 의해” 3가지 대응 조치를 선언
- 외무성은 “우리놈 농축작업에 착수한다”며 “자체의 경수로 건설이 결정되는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리놈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힘.
- 이어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며 “현재 폐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이상이 재처리됐다”고 밝힘. 이는 10·3합의에 따라 제거하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됨.
- 외무성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히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제 아무리 고립봉쇄하려고 하여도 당당한 핵보유국인 우리 공화국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며 “제재에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단호히 맞서나가는 것이 우리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대응방식”이라고 주장

● **조평통, 위조화폐설은 모략(6/12, 조선중앙통신; 조평통 서기국 보도)**

- 12일 조평통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남조선의 우익보수 언론들은 지난해 11월 부산지방경찰청이 100달러짜리 위조화폐를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유통시키려던 남조선인 4명을 적발·체포했다느니, 조사 결과 북에서 만들어진 위조화폐인 것으로 판명됐다는니 하는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고 주장
- 그는 “이전에도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우리 공화국(북)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위조 화폐설을 내들었던 바 있다”며 “남아 빠진 반공화국 모략 각본을 또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조치에 대한 제재 구실을 찾지 못해 안달이 난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의 궁색한 처지를 그대로 드러낼 뿐”이라고 주장
- 12일 조평통은 또 서기국 이름으로 ‘보도’를 발표해 남한 정부가 “있지도 않은 ‘북 정보’라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내돌리고 있다”며 “우리의 그 무슨 ‘미사일발사 준비’니, ‘핵시설 재가동’이니, ‘탄약비축’이니 뭐니 하는 자료들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로 알려주는 등 여러가지 수법으로 이른바 ‘북 정보’라는 것들을 여론화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

● **조선신보, 후계결정 시사대목 소개(6/12, 조선신보)**

- 조선신보가 12일 ‘제국주의와 의지전’을 강조한 6월 9일자 노동신문 논설을 소개하면서 “조선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의 하



나가 빛나게 해결되었다”는 대목을 부각시킴으로써 북한의 후계내정과 관련, 주목됨.

- 조선신보는 이날 ‘제국주의와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 제목의 장문의 노동신문 논설을 분석한 글의 제목을 ‘노동신문, “중대문제” 해결되었다고 강조, “올해는 더없이 의의 깊은 해”라고 담.
- 조선신보는 또 노동신문의 논설 2부는 “대를 이어 계승되는 의지전이 참다운 의지전”이라는 데 대해 서술했다며 주요 대목들을 발췌 소개한 뒤 이례적으로 논설 전문을 함께 소개

● 北, 안보리, 미국의 힘에 아침(6/12,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민주조선은 12일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책임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게 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안보리가 북한의 “자위적 핵활동”을 문제삼는 것은 “미국의 힘에 대한 아침”이라고 비난
- 신문은 “오늘 조선반도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에 추종하고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무책임한 처사에 있다”며 “안보리가 우리 공화국과 관련한 자기의 부당한 결의와 결정들을 철회하고 사죄하지 않는 한 조선반도의 근본문제는 절대로 풀릴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 北, 혁명무력 유일영도체계 강조(6/11,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선군정치는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영도체계에 의하여 담보되는 정치 방식’이라는 제목의 방송물에서 김일성방송대학 철학부 우향숙 박사의 발언을 통해 “전반적 혁명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정규무력과 민간무력 등 모든 형태의 혁명무력이 하나의 명령, 최고사령관의 명령만을 무조건 철저히 받아들이고 그 지시에 따라서만 한결같이 움직이는 규율과 질서”라고 역설
- 그리고 “일단 최고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전반적 혁명무력은 즉시 그 수행에 착수하며 한 사람같이 동원되어 철저히 관철하게 된다”고 방송은 강조, 방송은 “선군정치가 의거하고 있는 영도체계는 전반적 혁명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영도체계”라며 이같이 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강조

● 北, 세기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누리(6/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집중적인 선전선동 공세로 모든 150일 전투장들이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대와 세대, 세기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이라는 표현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 체제를 시사
- 노동신문은 당 조직들이 당원과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해 “150일 전투에서 세대와 세대, 세기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



리는 우리 인민의 수령 결사옹위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통전부, 對南 반정부 선동 강화(6/10,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대변인 담화)**

-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대변인은 10일 남한의 6·10 항쟁 22주년을 맞아 남한 주민들의 반(反)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담화를 발표
- 조국전선은 담화에서 “이명박 패당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아 독재 체제를 부활시킴으로써 남조선은 인민들의 자주적 권리와 존엄이 무참히 짓밟히는 자주와 민주의 폐허지대로, 최악의 인권불모지가 됐다”고 언급
- 담화는 “오늘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는 6월 항쟁의 정신으로 각 계층이 총궐기하여 결사 항전을 끝장을 볼 때까지 과감히 벌려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남조선 인민들은 제2의 6월 항쟁의 폭풍으로 민족적 재난을 몰아오는 이명박 패당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

● **北 김정일 20대 때 첫 집무 강조(6/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정운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150일 전투’의 첫 50일간 성과를 선전하는 글에서 “20대의 젊으신 우리 장군님”이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이른바 ‘당사업’을 개시한 45주년(6.19)을 거론
- 신문은 10일 ‘승리의 시간이 흐른다’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에서 ‘150일 전투’를 시작한 지 50일째라며 각 부문에서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는 등 “전 전선에서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

● **北, 美, 핵군축 원하면 모범 보여라(6/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핵습박곡질(습바꼭질)을 견어치워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핵 군축과 전파 방지를 원한다면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과 같은 핵전쟁 게임을 늘(할) 것이 아니라 핵무기 철폐에서 실천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또 “미국이 제창하는 남조선, 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은 본질에 있어서 핵선제공격론”이며 “노골적인 핵전쟁선언”이라고 비난하고, “미국은 핵습바꼭질로 농간을 부리려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놀음을 그만둘 때가 되고도 남았다”고 비아냥



- **北, 핵억제력, 보복타격용 공격수단(6/9, 민주조선; 노동신문)**
 - 민주조선은 9일 ‘우리의 핵시험은 정당한 자위적 조치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북한의 핵억제력을 “강력한 방어수단”이자 “보복타격을 가할 무자비한 공격수단”이라고 규정
 - 이어서 신문은 “우리의 핵억제력은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방어수단으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정의의 보복타격을 가할 무자비한 공격수단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도 9일 ‘위험한 군사적 광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적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선제타격에는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침략자들을 단호히 짓밟개버리는 것이 우리의 자위적 대응방식”이라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 건설공사중...2012년 강성대국 목표(6/1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시장과 아파트, 공장 등의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평양에서 이뤄지는 건설에는 중국과 중동 국가들의 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전언
 - 북한의 위성사진 연구자인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미국의 위성사진 업체가 지난달 촬영한 해주, 신의주 등 북한의 위성사진들을 과거 사진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북한의 건설 공사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시장과 아파트, 공장의 건설이 가장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고 RFA는 보도
 - 북한을 자주 방문하는 네덜란드의 정보기술 자문회사 GPI컨설턴시의 폴 치아 대표는 “북한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무실 빌딩과 호텔, 쇼핑몰 건설에 더 매진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과 중동 국가들에서 자본이 많이 들어가 건설 공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
- **北, 英관광객 비자발급 중단(6/11, 연합)**
 - 북한이 영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베이징의 북한 관광 전문업체 고려관광이 11일 밝힘. 고려관광은 이날 북한 국영 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가 “영국 정부가 최근 북한 시민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조치와 관련해 우리도 당분간 어떤 영국 시민도 관광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언
 - 북한을 방문하는 서방 관광객은 연간 2천여명이며 이 가운데 영국인은 수백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
- **北, 외국인용 대동강 보트관광 상품 개발(6/1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평양 대동강에서 즐길 수 있는 수상 보트를 내놓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베이징에 있는 북한관광 전문 ‘고려관광’의 사이먼 카커럴 대표의 말을 인용해 보도

- 카커럴 대표는 “북한 당국과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수상 보트를 즐길 수 있는 상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북한은 그러나 이 보트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북한 사람의 고용을 금하는 항목을 계약에 포함시켰다고 카커럴 대표는 소개

● **WFP, 北주민 식량섭취량 줄어들고 있어(6/11,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이 춘궁기를 겪으면서 이미 많은 주민들이 식량부족으로 압박감을 받고 있으며 식량 섭취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세계식량계획(WFP) 베이징사무소의 레나 사벨리 공보관이 강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
- 사벨리 공보관은 이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또 북한의 식량난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이 줄어들어 최근 몇달 사이에 북한 현지 활동 WFP 요원 수를 올해초에 비해 약간 줄였다고 소개
- WFP의 대북 지원국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단일 국가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 나라는 없으며, WFP는 대신 유엔 기금과 다자협력기구에서 마련한 기금을 북한에 배정하고 있음.

● **北, 대동강 상류 영원발전소 준공(6/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대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평안남도 영원발전소를 완공해 9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영원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대동강의 풍부한 물 자원을 이용해 전력생산을 늘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어떤 큰물(홍수)이 나도 평양시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발전능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박범기 내각 부총리, 평안남도 건설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준공식에서 노동당 중앙위는 축하문을 통해 “영원발전소가 완공된 것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를 쏘아 올린 것과 같은 쾌거”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원발전소를 일떠세운 건설자들이야말로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를 어떻게 받들고 결사옹위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영웅”이라고 주장
- * 1996년 공사에 착수해 13년 만에 완공된 영원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13만 5천여kW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대동강 상류지역에 있어 앞으로 여름철 대동강 홍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임.

● **北식당들에 식기세척기 보급, 노력절약(6/9, 조선신보)**

- 북한에서 “식당을 비롯한 봉사망(봉사시설)들에 회전식 그릇세척기(식기세척기)가 널리 도입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9일 소개
- 이 세척기는 세척술이 회전하면서 그릇의 겉과 안을 자동으로 닦아



주며 밥과 국 그릇, 접시를 비롯한 모든 식기들을 규정된 시간 내에 세척할 수 있다고 함.

- 조선신보는 또 북한의 '평양아명조명합영회사'가 다양한 에너지 절약형 조명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소개

라. 사회·문화 관련

● 北도 '녹색성장'에 관심(6월호, 조국)

- 북한도 최근 공장, 기업소들에 환경관리체계와 환경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월간 '조국' 6월호가 보도, 북한 국토환경보호성의 정형일 국장은 '조선(북한)의 환경보호 상황'이라는 제목의 이 잡지 특집기사에서 "조만간 우리나라(북한)에서도 환경 마크가 찍힌 '환경제품', '녹색제품'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또 "환경보호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에도 더 큰 힘을 넣음으로써 에너지 절약기술, 폐기물 재자원화 기술 등 보다 능률적인 환경보호 기술을 개발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전반적으로 도입해 나가려고 한다"고 언급

● 몽골장관, 北발사축하 모임서 일부주민 의문 표시(6/1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장거리 로켓 발사에 관한 북한 언론의 보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수흐바타르 바트볼드 몽골 외교부 장관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
- RFA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바트볼드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민간연구소인 국가정책연구소의 강연회에 참석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인공위성 발사를 축하하는 평양의 어느 모임에서 북한이 실제로 위성을 발사했는지에 의문을 나타낸 참석자들이 많았다"며 "이들이 과거와는 달리 북한 언론의 관련 보도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언

● 北, 신종 플루 예방사업 활발(6/10,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보건성 중앙위생방역소가 최근 각국에서 급격히 전파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A(H1N1.신종 플루)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예방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0일 보도
- 중앙위생방역소는 평양시를 비롯해 북한 전역의 위생방역소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장악 추진 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생선전 사업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



● **北, 10여년만에 야생동물 전면조사(6/9, 조선신보)**

- 북한이 1990년대 후반에 이어 10여년 만에 다시 야생동물 전면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9일 보도
- 북한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와 생물분원 생물다양성 및 생태기술 연구센터, 국토환경보호성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 조사는 “동물자원의 분포 상태와 자원량, 특히 특산종과 위기종, 희귀종들의 상태 확인에 주력”해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관한 자료를 종합,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신문은 설명

2. 대외정세

가. 안보리 재재관련

● **안보리 대북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6/13, 연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오후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한 대북 결의안을 공식 채택, 결의안은 전체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 합의로 채택
-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들을 확대하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훨씬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이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재 이행정도에 따라 북한은 상당한 금융압박 등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에서 최종 합의된 결의안 초안을 수정없이 통과
- 안보리 현장 7장 41조에 의거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명시해 1718호 때 그냥 ‘규탄한다’고 한 것에 비해 가장 높은 수위의 비난 문구를 담음.
- 또 무기금수 대상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중화기 등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기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도 금지
- 금융제재도 기존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을 하지 말도록 하는 등 북한의 무기 개발·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들이 포함
- 또 제재 대상 기업과 물품, 개인의 지정을 포함해 결의 1718호의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30일 이내에 조정기로 해, 제재대상 기업이 현재 3개에서 일부 추가 될 것으로 보임.
-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 조치와 무기금수 확대,



1718호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채택 일로부터 45일 내에 보고하게 됨.

나. 북·미 관계

● 클린턴, 北도발행위에 깊은 유감(6/14,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 채택에 맞서 우라늄 농축작업과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등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도발적 행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
- 클린턴 장관은 이어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유엔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핵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와 관련, “북한이 지난 수개월 동안 해온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 통일된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이용해 핵무기를 발사하려는 능력을 보유하려는 시도가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제사회를 대표해 보여준 훌륭한 성명”이라고 언급

● 美국무부, 北에 도발중단-6자회담 복귀 촉구(6/13, 연합)

- 북한이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맞서 우라늄 농축 작업 등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provocative actions)’들을 중단하고 북핵 6자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

●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주요의제는 북한문제(6/12, 백악관 대변인)

- 로버트 기브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내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는 북한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

● 美정보당국, 김정운 후계지명 확인(6/12, 폭스뉴스)

- 미국 정보당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3남인 김정운을 지명했다는 그간의 보도와 관측을 처음으로 사실로 확인했다고 폭스뉴스가 12일 보도, 미 정보당국은 김정운 후계확정과 관련해 북한군 내부에 시달된 지시 및 북한 재외공관이 김정운의 후계지명을 축하하면서 ‘충성서약’을 한 전문을 중간에 입수한 것으로 알려짐.
- 미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군부 지도자들은 6월 3일 “북한 군대 및 주요 군사기관 내부에서 정운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긴 6가지 말씀요지를 하급 간부들에게 시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함.



- 설득요지들 가운데는 “김정은은 군사적으로 천재이며, 장군님(김정일)의 후계자”라고 치켜세우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美정보당국, 北 3차 핵실험 정보 파악(6/11, 폭스뉴스)**
 - 미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이뤄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대응,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주요 행정부 관리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폭스뉴스가 11일 보도
 - 특히 미 중앙정보국(CIA)이 북한 내 소식통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12일로 예정된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이 이뤄지게 되면 4가지 행동에 나설 계획이며, 핵실험은 이 가운데 하나라고 폭스뉴스는 보도
 - 나머지 3가지 행동은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긴장고조, 북한 서해안 군사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라고 이 방송은 보도
- **보즈워스, 北 테러국 재지정 효과 미미(6/12, 연합)**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1일 북한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미국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
 -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오후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대북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만약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돌아오지 않고 대립국면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지역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그러나 보즈워스 대표는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음.
 -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의 후계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론의 보도가 근거를 두고 이뤄졌든 아니든 관측성에 그치고 있는 것이 공식적인 지명절차는 없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지도자가 누가되든 북한을 있는 그대로 봐야지, 북한이 장차 이럴 것이라고 예단하는 방향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언급
- **美국방, 北, 군사행동 준비정황 없어(6/12, 연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군사 행동을 준비하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1일 밝힘.
- **보즈워스, 北 침공·정권전복 의도 없다(6/10, 연합)**
 - 미국은 북한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간 노력의 하나로 양자 대화와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으며, 북한을 침공하거나 무력으로 정권을 바꾸려는 의사는 전혀 없다고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



표가 9일(현지시간) 밝힘.

- 그는 “북한이 미국에 의한 위협 또는 적대정책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와 반대로 우리(미국)는 북한을 침공하거나 무력으로 정권을 바꿀 의도가 없고 이는 북한에도 반복적으로 명백하게 전해졌다”고 강조
-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견해가 다른 국가들과 직접 대화할 의지를 표명해왔고 이는 북한에도 직접 전달됐다. 특히 6자회담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어가고 양자 대화를 지속하고 비핵화 및 정상적 관계를 위한 노력을 할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신호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북한에 대한 실망감도 표시

● **미국방, 北 미사일 요격 자신(6/9, 연합)**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9일 북한이 미 본토를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을 현재 갖추고 있는 미사일방어 체제만으로도 충분히 요격할 자신이 있다고 밝힘.
- 게이츠 장관은 “현재 배치된 요격미사일 30기는 앞으로 수년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만일 그같은 위협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커진다면 요격미사일 수를 어렵지 않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美, 북한에 특사 파견 이미 제안(6/8, CNN)**

- 미 정부가 북한에 앨 고어 전 부통령과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가운데 한 명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미국 CNN이 8일(현지시간) 보도, 미 정부는 고어 전 부통령과 리처드슨 주지사 가운데 한 명을 북한 측에 특사로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북한 측으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짐.

● **백악관, 北 핵·여기자 연계조짐 없어(6/8, 미백악관)**

- 미국 백악관은 8일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 국적 여기자 2명에 대한 북한 당국의 ‘12년 노동교화형 선고’와 관련, 이들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즉각 석방을 촉구
-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건은 인도적 문제”라면서 “이들 여성들은 결백하며, 가족들에게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 또 “정부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억류는 다른 문제들과 연계된 것이 아니며,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힘.



다. 북·중 관계

● 中, 유엔 안보리 결의안 지지(6/13,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은 13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지난 5월25일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지지한다고 밝힘.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핵비확산의 유효성을 침해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
- 그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적당하고 형평성에 맞는 반응을 보인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하고 “중국은 책임감을 갖고 건설적인 태도로 협상에 참여했다”고 설명, 친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북한의 핵실험을 결사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강조
- 그는 “중국은 북한이 주권 국가이자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한 행동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NPT(핵확산금지조약) 복귀 이후 누릴 수 있다”고 언급

라. 북·일 관계

● 日자위대, 북한 화물검사 정보제공 한정(6/14, 요미우리신문)

- 일본 정부와 여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874호에 따라 실시하는 화물검사와 관련, 해상자위대의 활동은 수상한 선박 등의 정보 수집에 한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4일 보도
- 이는 해상자위대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경우 북한과의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 일각에서 신중론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알려짐.

● 日, 대북 추가 제재안 내주 각의 결정(6/12, 산케이 신문)

- 일본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조치로 북한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 등을 담은 추가 제재안을 오는 16일 각료회의에서 공식 결정할 계획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2일 소개
-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또 신속한 대북 제재 발동을 위해 이런 추가 제재안을 각료회의 의결과 동시에 공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
-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 및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 대상으로 쇠고기, 송이, 참치 등 24개 품목의 사치품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엔 2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수출을 전면 금지키로 했음. 일본 정부는 일단 내년 4월 13일까



지 수출 전면 금지 등 추가 제재를 시행하고, 추후 북한의 자세 변화 등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

-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인적 왕래 제한 대상도 확대하는 등 대북 압박도 강화키로 했음. 1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북 무역과 관련된 제재를 위반해 형이 확정된 재일외국인이나 외국인 선원도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

3. 대남정세

● 北, 개성은 軍요충지…값어치 환산불가(6/12, 연합)

- 북한이 11일 열린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토지임대료로 5억달러를 요구하면서 6.15공동선언 이행 문제를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
- 12일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전날 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공단 부지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며 군사 요충지를 남한에 내 준 것은 6.15 공동선언 때문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짐. 북측은 이어 “남측이 6.15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6.15의 혜택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면서 토지사용료 5억달러를 요구한 뒤 ‘남측 토지 분양가격을 감안하면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는 언급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언
- 회담에서 북측은 토지임대료 외에 개성공단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로 올려 줄 것과 2015년부터 부과기로 되어있는 토지사용료를 평당 5~10달러로 책정, 내년부터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유씨 개성에 있나? 北 편한 대로 해석해라(6/12, 연합)

- 11일로 북한 역류 74일째를 맞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는 이날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접촉에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함. 우리측은 회담 전부터 유씨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이날 회담 기조발언 등을 통해서도 유씨를 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측은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와 임금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강조하면서도 유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함.
- 정부 대표단장을 맡은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는 이날 개성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유씨를 접견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는 “유씨가 개성에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고 묻자 북측은 ‘편한 대로 해석해도 좋다’고 답했다”고 답변, 정부 당국자는 “아직 개성에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다시 언급



<첨부1> 北외무성 ‘유엔결의 반발·우리농 농축’ 성명

- 북 외무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 1874호가 채택된 것과 관련, 13일 성명을 내고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하고, 우리농 농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외무성 성명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6월12일 미국의 사측 하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끝내 우리의 2차 핵시험을 걸고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채택했다. 이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미국 주도하의 국제적 압박공세의 또 하나의 추악한 산물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 결의로도 모자라 위조화폐요 마약밀매요 하는 허구들을 조작해내 각기 우리나라에 대한 단독 제재를 더 가하기 위한 비열한 음모까지 꾸미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더욱 깊숙이 끌어들임으로써 조선반도에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첨예한 대결국면을 조성했다.

이 대결은 한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부정해 나선 미국과 그에 추종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불법무도한 강권행위에 의해 발단됐다.

미국이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4월14일부 의장성명에는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으며, 오직 제도를 달리하는 나라에 대한 적의와 거부감,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순종해야 한다는 오만과 전횡만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는 작지만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이다. 미국의 강권행위가 용납된다면 우리 공화국은 남들이 다 하는 위성발사를 다시는 할 수 없게 되며 우주 이용 권리를 영원히 빼앗기게 된다.

우리의 2차 핵 시험은 이러한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해 단행된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자위적 조치다. 오늘의 이 대결은 본질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관한 문제이며 조-미 대결이다.

자주와 평등을 떠나서 진정한 평화란 있을 수 없다. 누구든 우리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핵보유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으로 인한 불가피한 길이었음을 알고도 남을 것이다.

이제 와서 핵 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보유를 누가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의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 배격하며 미국과의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의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첫째,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 현재 폐연료봉은 총량의 1/3 이상이 재처리됐다.

둘째, 우리늄 농축작업에 착수한다. 자체의 경수로 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리늄 농축기술 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시험단계에 들어섰다.

셋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제 아무리 고립 봉쇄하려고 하여도 당당한 핵보유국인 우리 공화국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 제재에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단호히 맞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대응방식이다.

주체 98(2009)년 6월13일 평양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유엔 대북제재

● “SCO 정상회의서 북핵문제 논의”(6/14)

-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 문제가 15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개막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연례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 말했다. 대통령 측근인 세르게이 프리코드코는 14일 모스크바에서 “정상들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및 최근 핵실험들 뿐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 그는 “인접국들은 물론 전 세계에 대한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위들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나, 북한에 대한 특별한 문건은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SCO 연례 정상회의에 이어 ‘브릭스(BRICS)’ 4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예카테린부르크에 도착했다.

● 바이든 “유엔 대북제재 결의 실행”(6/14)

-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14일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실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 “유엔 결의를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매우 불안정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그런 제재들(유엔 제재들)을 실증(實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 북한의 최근 일련의 행동 배경과 관련된 질문에 “동기들을 추정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는 현실을 대처하기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 빅터 차 “북핵, 관리하며 시간 가져야”(6/14)

-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14일 북한을 상대로 당장 핵프로그램의 완전 폐기 등을 협상에서 다루는 것보다 동결이나 불능화 등을 통해 핵 확산을 봉쇄하면서 시간을 갖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를 지낸 차 교수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원하고 있으며, 김정일은 정권 생존이라는 근본적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할 선택 방안으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



그램을 김정일과 협상하는 것과 일단 핵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국제 감시체제 하에 두는 방안이 있다면 후자가 미국 및 아시아 동맹국의 이익에 맞다고 주장했음. 그는 “완전한 비핵화가 명백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북한 핵능력의 동결, 불능화 등은 협상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음. 그는 “협상으로 미국이나 북한이 원하는 것을 결코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동결 등의 방안)은 이 문제를 관리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음.

- 차 교수는 부시 행정부 시절 6자회담을 통해 김정일이 그렇게도 원해 왔던 안전보장을 위해 NSA(소극적 안전보장.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 공격을 하지 않는다)를 보장했음에도 북한은 이를 무시했다면서 북한의 요구와 욕망이 바뀔 수 있음을 지적했음. 그는 북한은 단순한 핵폭탄이 아니라 핵보유국을 원하고 있으며, 정권 지탱에 미국이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음.
- 특히 북한은 핵을 가진 인도가 얻은 것과 비슷한 협상의 결과를 원하고 있다면서 인도처럼 자신들을 위해 전세계의 규범을 다시 쓰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는 또 시간이 끝나기 전 시험을 보러 달려가는 학생처럼 김정일이 죽기 전 자신의 아들을 위해 최소한을 얻으려고 서두르는 것 같다고 최근의 북한 행동을 분석했음.

● “北 더 고립 자초..6자회담복귀 가능성 ‘제로’”(6/14)

-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C. 부시 선임연구원은 13일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반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행위를 전쟁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스스로 더 어렵고 고립화하는 행위”라면서 북한이 현 상황에서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음.
- 부시 선임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같은 위협에 대해 “북한은 스스로 점점 더 어렵고 고립화시키고 있다”면서 “궁지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점점 더 깊은 궁지에 빠져들고 있다”고 비유했음. 그는 미국 측의 대응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폭력적인 사태에 대해서도 신중하면서 확고한 인내심을 갖고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해 북한의 위협이나 경고 때문에 미국 정부가 과거처럼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음.

● 클린턴 “北도발행위에 깊은 유감”(6/14)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 채택에 맞서 우라늄 농축작업과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등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도발적 행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했음. 클린턴 장관은 이어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유엔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핵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클린턴 장관은 이날 미국과 캐나다 국경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캐



나다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한의 계속적 도발행위는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그들은 모든 이들로부터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 더 고립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와 관련, “북한이 지난 수개월 동안 해온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 통일된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이용해 핵무기를 발사하려는 능력을 보유하려는 시도가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제사회를 대표해 보여준 훌륭한 성명”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북한에 의한 핵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유엔 대북 결의사항을 활발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국무부, 北에 도발중단-6자회담 복귀 촉구(6/13)

- 북한이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맞서 우라늄 농축 작업 등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provocative actions)’들을 중단하고 북핵 6자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은 도발적 행동 및 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6자 회담에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 “北, 핵실험.미사일 비언급 주목” <日 전문가> (6/13)

-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에 반발해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의사 등을 선언한 데 대해 일본 시즈오카(静岡)현립대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교수(국제관계론)는 13일 “북한은 4월 이후 도발적인 성명이나 행동을 반복했지만 이번은 도발의 수준을 떨어뜨린 온화한 성명”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성명에서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우라늄 농축 착수 방침을 밝혔지만, 더욱 도발적인 3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론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하고 “이런 태도는 최근 2주간 일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즈미 교수는 “우라늄 농축의 경우 경수로용 저농축 우라늄 제조가 목적일 것이며,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는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인 만큼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북한은 태도를 유연화시켜 협상 모드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 이어 이즈미 교수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해 묵묵히 북한에 제재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태도를 변화시켜, 재차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군사평론가인 다쿠쇼쿠(拓殖)대 에바타 겐스케(江畑謙介) 객원



교수는 “북한이 우리나라 농축 착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 아 니냐”며 “성명에서 미사일 및 핵실험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예상 밖이지만, 핵무기 개발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표명한 것이 중요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6자회담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 황”이라며 “향후 어떻게 협의를 계속해 북한을 다시 돌아오게 하느냐가 최대 초점이지만, 유효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北 경고가시화 전 협상 모색해야” <러 전문가> (6/13)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국제관계·국제경제연구소 게오르기 톨레라야 박사는 13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반발해 내 놓은 우리나라 농축 작업 착수 등을 막기 위한 협상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톨레라야 박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우리나라 농축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 알 수 없지만, 이들이 밝힌 내용은 한반도를 긴장시키기에는 충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또 다른 프로토콜이 필요할지 모른다”면서 “북한은 더 강한 카드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그는 또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는 러시아 정부가 말했듯이 어느 정도 균형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특히 무기 등 금수 물품을 운반한다고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을 가능케 한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투명하지 않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무기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 수출 통제는 상징적인 위협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현 국면을 ‘본질에 있어서 조미(북미)대결’로 규정한 것과 관련, “미국이 안보리 제재와 별개로 추가 금융제재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대화 시도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北, 유엔결의 맞서 우리나라 농축 선언(6/13)

- 북한은 13일 외무성 성명을 발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874호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우리나라 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치를 선언했다.
- 성명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 배격하며 미국과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한다”며 “위임에 의해” 3가지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결의 채택 15시간여만에 신속하게 선언했다.
- 외무성은 “우리 농축작업에 착수한다”며 “자체의 경수로 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혀 우리나라 농축이 본격화될



것임을 언급했음. 또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며 “현재 폐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 이상이 재처리됐다”고 밝혀 10.3합의에 따라 제거하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음.

● “유엔 제재결의 효과 中에 달려” <日 전문가> (6/13)

-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 히라이와 순지(平岩俊伺) 일본 시즈오카(静岡)현립대 교수(현대조선론)는 “안보리 결의는 일정한 압력을 기대할 수 있지만, 효과 수준은 북한이 무역과 투자를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음. 그는 13일 자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기고를 통해 “중국은 아직 북한을 진정으로 몰아세우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히라이와 교수는 “중국은 당분간 압력 강화에 나설 미국 등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북한이(국제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대화 창구역을 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미국, 중국, 북한, 러시아 등 4개국 간의 대화의 틀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음.
-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 동결 등이 조건이 되는 대화의 장에는 곧바로 복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추가 강경책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음.

● “中, 北 핵실험 뒤 독자 제재” <도쿄신문> (6/13)

- 북한이 지난달 2차 핵실험을 한 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량을 줄이는 등 독자적인 제재에 착수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북중 관계 소식통 및 외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3일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4월 로켓을 발사한 이후에도 중국은 대북 수출 물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은 이런 조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도 북한의 6자회담 조기 복귀를 위해 물밑에서는 독자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음.
- 중국은 헤이룽장성에서 나오는 원유를, 북한과의 국경 지대인 단둥 외곽에 있는 비축시설로부터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 중국의 원유 공급은 북한의 에너지 사정을 좌우하고 있음. 중국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던 2006년 10월에는 ‘송유관 점검’ 명목으로 원유 공급을 일시 정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직후인 지난달 25일 이후 원유 공급량을 줄였음.



● 中 “유엔 안보리 결의안 지지”(6/13)

- 중국은 13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지난 5월25일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핵비확산의 유효성을 침해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적당하고 형평성에 맞는 반응을 보인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하고 “중국은 책임감을 갖고 건설적인 태도로 협상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 친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북한의 핵실험을 결사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이 주권 국가이자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한 행동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NPT(핵확산금지조약) 복귀 이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친 대변인은 “제재는 안보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정치와 외교 채널은 한반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채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가 이번에 통과시킨 결의안은 북한을 향해 각방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적극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 라이스 “안보리 결의 오늘부터 즉각 발효”(6/13)

- 수전 라이스 미국 유엔대사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과 관련, “미국은 안보리 결과에 만족하며, 이는 북한에 강력한 영향과 신호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대사는 이날 대북 결의안 채택 직후 백악관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안보리는 결의는 오늘부터 즉각 발효된다”고 말했다.
- 라이스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무모하고도 위험한 행동을 보여온 북한의 행태로 미뤄볼 때 북한이 이번과 같은 강력한 제재체제에 반발, 추가적인 도발과 불안조장 행위를 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가 오늘 다짐한대로 해나갈 것이고, 현 시점에서 일개 국가에 부과된 가장 강력한 제재를 최대한도까지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특히 그는 “우리는 다른 회원국들과 더불어 이번 조치를 최대한 이행해 북한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겠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 하나하나에 대응함으로써 북한 장난에 놀아날 생각은 없고, 제재를 최대한도까지 이행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마련, WMD 및 미사일 기술의 확산에 실질적인 타



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보리 한 목소리로 北핵실험 비난>(6/13)

-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12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행위를 한 목소리로 비난했음. 이날 낮 12시 유엔본부 2층 안보리 회의장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 10분도 안돼 결의 채택 여부에 각국 대사는 일제히 손을 들어 찬성했고, 의장국인 터키의 바키 일킨 대사는 만장일치로 결의가 채택됐음을 선언했음.
- 지난달 25일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5개 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국이 결의안 마련과 채택을 위한 안보리 전체회의까지 3주 가까이 시간이 걸렸던 것에 비하면 전광석화 같은 채택 절차였음.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에 일치된 의견임을 보여준 것임.
-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중국 등 일부 국가들도 북한 핵실험이 초래할 지역 안정의 위협이나 핵 확산 우려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음.
- 로즈메리 디칼로 미국 차석대사는 “이 결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북한의 행위가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고 국제사회가 이에 대응하기로 한 것” 것이며 북한이 무조건 평화적인 대화 과정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본의 다카스 유키오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전적으로 용납될 수 없고 안보리의 강력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며 제재 조치로 북한이 행동을 바꾸고 결의의 의무에 따를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음.
- 중국과 러시아도 다소 신중한 모습인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대화 복귀를 강조했다. 중국의 장예수이(張業遂)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쳤고 이번 결의는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입증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각국의 신중한 조치를 함께 촉구했음. 장예수이 대사는 이번 결의가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함으로써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한뒤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각국도 충분한 근거를 갖고 신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도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에 만족한다”면서 “핵 미사일을 만들려는 북한의 시도는 안보를 강화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에서 긴장만 고조시킨다”고 지적하고 “이번 결의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안보리 ‘대북 결의 1874’ 만장일치 채택(6/13)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오후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한 대북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음. 결의안은 전체 15개 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아 만장일치 합의로 회의 시작후 불과 3분만에 채택됐음. 이날 채택된 결의 1874는 지난 10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에서 최종 합의된 결의안 초안에서 한글자도 수정되지 않은 것.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 검색 조치들을 확대하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훨씬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향후 제재 이행 정도에 따라 북한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안보리 헌장 7장 41조에 의거한 결의 1874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명시해 1718호 때 ‘규탄한다’고 한 것에 비해 가장 높은 수위의 비난 문구를 담았음. 또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음.
- 구체적 제재로는 무기금수 대상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중화기 등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도 기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도 금지했음.
- 금융제재도 기존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을 하지 말도록 하는 등 북한의 무기 개발·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들이 포함됐음.
- 또 제재 대상 기업과 물품, 개인의 지정을 포함해 결의 1718호의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30일 이내에 조정기로 해 제재대상 기업이 현재 3개에서 일부 추가 될 것으로 보임.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 조치와 무기금수 확대, 1718호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채택일로부터 45일 내에 보고하게 됨.

● “북핵 해결은 ‘주고받기’가 유일책” <美전문가>(6/12)

-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가 임박한 가운데 북한의 핵문제를 풀기 위해선 ‘죄와 벌’식 접근법은 실효성이 없으며 부단한 외교적 ‘주고받기’식 접근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리언 시걸 미국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국장이 주장했다. 시걸 국장은 노틸러스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에 처벌이 안 통하는 이유와 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지난 10일자 글에서 “오바마 미 행정부가 변화를 약속해놓고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가 썼던 똑같은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국



북한 내 소식통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12일로 예정된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이 이뤄지게 되면 4가지 행동에 나설 계획이며, 핵실험은 이 가운데 하나라고 폭스뉴스는 전함.

- 나머지 3가지 행동은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긴장고조 ▲북한 서해안 군사 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라고 이 방송은 덧붙임. 미 정보당국은 이번 주에야 이 같은 북한의 계획을 파악하고, 긴급히 오바마 대통령과 국가정보국(DNI)에 주의를 환기시킨 것으로 알려짐. 폭스뉴스는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힘든 북한에서 어떻게 이 같은 정보를 얻었는지는 정보당국의 활동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임을 들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백악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코멘트를 거부했다고 방송은 덧붙임.

● 美 “北.이란 미사일개발 중대진전 이뤄”(6/12)

- 북한과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을 통해 그동안 중대한 진전을 이룩했다고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국장인 패트릭 오라일리 중장이 11일 평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오라일리 중장은 이날 의회의 한 포럼에서 “북한과 이란 사이에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있었다”며 “우리는 이들의 협력을 수년 동안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이에 대해 그는 북한과 이란이 탄도미사일 관련된 항공전자공학과 추진장치 등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해왔다고 지적함. 특히 그는 북한과 이란의 안정적인 점화와 2단계 추진 능력을 갖춘 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함. 북한과 이란 두 나라 가운데 누가 미사일 개발분야에서 우위에 있느냐는 질문에 오라일리 중장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함.

● 보즈워스 “北 테러국 재지정 효과 미미”(6/12)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1일 북한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미국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함.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오후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대북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만약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돌아오지 않고 대립국면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시아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함. 그러나 보즈워스 대표는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음. 보즈워스는 대표는 “우리는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북한의 핵확산 방지 및 금융 제재 조치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 및 미사일 실험에 대비한 군사적인 대응능력도 갖추나갈 것”이라고 말함.



- 특히 보즈워스 대표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개입과 대화를 외교의 기조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 “북한이 내일 당장이라도 대화테이블에 돌아온다면 우리는 이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6자회담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유용한 대화의 장을 제공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으로 조속히 돌아오길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도 이런 미국의 생각을 공유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함.
- 이어 그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재지정은 법률적으로 북한이 반복적으로 테러리즘을 지원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바탕 위에서 이뤄지게 된다”면서 “설령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려놓는다고 해도 새롭게 제재효과를 거둘 것은 없다”고 말함. 그는 “북한은 현재 미국의 다른 법령에 따라 자산동결 및 기타 제재 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지정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함.

● 미국방 “北, 군사행동 준비정황 없어”(6/11)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과 관련, 북한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밝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방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브뤼셀을 방문한 게이츠 장관은 회의 참석 전 기자들에게 “북한은 매우 예측할 수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호전적 수사를 일축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그는 “우리는 (북한을) 주시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매우 면밀히 (북한을)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함.
- 북한은 지난달 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와 관련, “안보리의 적대 행위는 정전협정의 파기”라면서 “안보리가 더 이상의 도발을 해 오는 경우 우리의 더 이상의 자위적 조치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밝힌 상태임. 게이츠 장관은 하지만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북한군 배치가 전쟁이 임박한 것 같은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으며, 군대의 동원 체제를 갖추거나 이동을 하는 등의 동향은 없다고 전함. 그는 “북한군이 작전을 수행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할 동향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북한군의 움직임은 현재 꽤 일상적이기 때문에 조금 안심은 된다”고 말함. 그러나 그는 “거듭 말하건데, 그들은 너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함.

● 中 “유엔 대북제재 형평에 맞고 적당해야”(6/11)

-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할 대북제재 결의안이 형평성에 맞고 적당해야 한다고 11일 밝힘.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책임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안보리



결의안에 관한 논의에 참여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함.

- 친 대변인은 “형평성에 맞고 적당한 안보리 결의안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핵확산 방지, 동북아 평화 및 안정에 유리하다”고 강조함. 그는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반대해온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라고 덧붙임.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으며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경한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계획임.

● 러 “北, 안보리 제재에 민감대응 안할 것”(6/11)

- 러시아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러시아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 11일 보도함. 이 소식통은 “대북 제재 결의안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해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행동이 뒤따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함.
- 10일 관련국간 합의를 이룬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안보리 전체 회의에 부쳐져 회람됐으며, 안보리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경한’ 대북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앞서 러시아 국방부 알렉산드르 콜마코프 제1차관은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 지도부가 러시아와 다른 관련국의 공통된 입장을 고려해 좀 더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판단, 행동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힘.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들은 북한이 오는 29일까지 원산 동부 해역(길이 263km, 폭 최대 100km)을 선박 항해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자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러시아 고위 외교관이 다음 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측과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또 다른 외무부 소식통이 전함. 이 외교관은 성 김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북핵 문제는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이 소식통은 “북핵 6자회담 진전 방향 등 한반도 핵 문제와 관련된 포괄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함.

● 日 관방장관 “對北 제재 법정비 검토”(6/11)

- 일본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11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제재 결의 합의안에 공해상에서의 화물검사를 회원국에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일본도 이를 따를 수 있도록 국내법 정비를 검토할 것임을 밝힘.
- 가와무라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기자회견에서 자위대 등이 실시하는 공해상의 화물검사에 대해서는 현재 ‘주변사태’ 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주변사태관련법의 선박검사활동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개



정이나 신법 제정을 놓고 검토할 것임을 시사함. 그는 “현재의 주변 사태관련법으로는 공해상의 화물검사라는 유엔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고 지적, 이번 국회에서 법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무상은 이날 오전 참의원 외교 방위위원회에서 안보리 결의에 관해 “관계성청에서 긴밀히 연락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결의에 따른 추가제재 조치의 검토도 착수할 것임을 시사함. 나카소네 외상은 또 각국과 연대해 결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중국 등 관련국에 제재 조치 이행을 촉구해나갈 것임을 밝힘. 화물 검사에 대해서는 자민당도 구체적인 법안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 <타임의 北 전쟁도발 가능성 분석>(6/11)

-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10일 인터넷판에서 ‘북한은 새로운 한국전을 일으킬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남북간의 충돌 가능성을 분석하는 기사를 실음. 이 잡지는 한반도는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 탓에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 과시는 적대행위 재개 가능성에 대한 많은 사람의 우려를 고조시켰다”고 지적함.
- 타임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현재 평양 내부의 정치불안이 ‘대결’(confrontation)의 위험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작년에 뇌졸중으로 건강이 약해진데다 후계자인 삼남 김정운은 아직 권력승계 준비가 안 돼 있으며, 군부는 권력승계 과정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들려는 것이 정치불안 요소라는 것임. 데니스 블레어 미 국가정보국장도 8일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도발 행위가 권력승계 문제와 맞물려 잠재적으로 위험한 결합(mixture)이 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음.
- 타임은 그러나 긴장고조에도 불구하고 전쟁발발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들은 많다면서, 미군의 지원을 받는 남한은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장사정포 등 1만3천여문의 야포를 서울을 겨냥해 배치 중이고, 비무장지대 30마일 내에 1천만명 이상이 살고 있어 전쟁을 원치 않으며,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도 전쟁이 발발할 경우 김정일 체제의 붕괴가 분명해지는 만큼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지적함.

● <中전문가 “유엔의 대북제재는 당연”>(6/11)

- 중국은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에서 강경한 내용의 대북 제재안이 합의되는데 대해 전반적으로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임. 중국은 11일 오전 현재



이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관영 신화통신을 비롯한 언론매체들은 북한에 대한 기존 결의 1718호에 비해 강화된 내용을 담은 새 결의안이 합의됐다고 주요 뉴스로 즉각 보도함.

- 언론들은 논평은 담지 않았으나 무기금수, 화물검색 의무, 금융제재 등 강화된 대북 제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 새 제재를 당연시 하는 분위기를 보임.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선스순(沈世順)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태안전·협력연구부 주임은 중국은 북한 핵실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할 것이 예상됐었다고 밝히고 중국이 북한을 과거처럼 무작정 감싸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함.
- 선 주임은 중국의 대북정책은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약간씩 변하기도 한다고 밝힘.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합의한 것은 이러한 ‘작은 변화’의 하나로 보면 되고 이 작은 변화는 중국이 지난 2006년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찬성했을 때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임. 한반도의 비핵화는 중국의 대북정책의 3대 원칙중의 하나인데 북한이 핵실험으로 이에 정면도전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의지가 중국의 안보리 결의안 합의에 반영됐다고 선 주임은 말함.
- 중국은 그러나 대북제재만으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없고 어차피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끌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선 주임은 전망함. 그는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해서 안보가 더욱 보장되느냐고 반문하고 미국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권을 붕괴시킬리도 없고 북한은 오히려 핵을 가지면 국제사회에서 더욱 궁지에 몰릴 뿐이라고 역설함.

● 캠벨 “북핵 용납못해..협상준비 돼있다”(6/11)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10일 “북한이 다자적 맥락에서 협상의 테이블로 돌아온다면 우리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측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힘. 캠벨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여전히 문을 좀 열어두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그는 동시에 “핵을 가진 북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도 우리는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을 가진 북한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 정책의 기본”이라고 강조함. 그는 북한과 향후 협상이 재개될 경우에는 “단순히 비영구적인 조치가 아닌 ‘되돌릴 수 없는 조치’에 더욱 찾아야 한다”고 언급, 완전한 비핵화 조치에 주력할 방침임을 전함. 캠벨 지명자는 이어 북핵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의 대책과 관련, “확장억지력이라는 미국 공약의 지속성을 동맹들이 인식토록 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다”고 밝힘. 그는



“이는 우리 정책의 기초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한국, 일본에게 이를 매우 명확히하고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그는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확신을 (한·일 양국에) 주는 것이 우선 중요하며, 이를 위해 외교적, 국방적 조치들 모든 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함. 이와 관련, 그는 향후 정책중점 추진 방향을 밝힌 모두 성명에서 “미국은 동맹국 방위조약을 받들 확고한 결의가 돼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 파트너”라고 밝힘. 그는 또 최근 일련의 북한 행동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제사회에 직접적이고 무모하게 도전하며 동북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함.

● 리 국방차관 “北, 냉철히 판단하고 행동해야”(6/10)

-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 고위 당국자가 10일 북한의 냉철한 판단과 행동을 촉구했다고 뉴스통신 이타르 타스가 보도함. 러시아 국방부 알렉산드르 콜마코프 제1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면서 이와 같이 말함. 그는 이어 “북한 지도부가 러시아와 다른 관련국의 공통된 입장을 고려해 좀 더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판단, 행동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함.

● 리 전문가들 “SCO, 북핵 중재자 역할 가능”(6/10)

-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상하이협력기구(SCO)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10일 이타르 타스가 보도함. 이날 ‘극동 러시아에서 SCO의 진로’라는 주제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임.
- 보도에 따르면 극동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활동하는 참석자들은 SCO가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네벨스키 국립해양대학 국제문제센터의 타기르 후지야토프 수석 연구원은 “SCO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협상 중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함. 지난 2001년 상하이에서 설립된 SCO는 중국, 러시아를 주축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회원국, 이란과 인도, 파키스탄, 몽골이 옵서버로 참여하며 러시아는 지난해 8월 의장국이 됨.
- SCO는 역내 평화·안보 안정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을 주로 논의해 왔으나 최근에는 경제, 에너지, 군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한편, 오는 15일 러시아 제3대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리는 SCO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이 논의될지 주목됨.



● “러, 北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 입수”(6/10)

- 러시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계획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으나 미사일 발사시점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러시아군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10일 보도함. 이 소식통은 “우리는 (북한이 발사하려는) 미사일의 종류와 제원 등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으나 발사 시점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함.
- 하지만 이 소식통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러시아는 즉각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이 소식통이 언급한 미사일이 단거리인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AFP 통신은 전함. 이 외교관은 또 북한이 서해와 동해의 특정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항행을 금지한 조치는 새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덧붙임.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최종 합의(6/10)

- 난항을 거듭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주요국 간에 최종 타결됨. 유엔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해 온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이 모두 초안에 동의했다”면서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초안을 회람할 것”이라고 말함.
- 전날 주요국 회의에서 ‘본국의 훈령’을 이유로 초안에 동의하지 않았던 러시아는 미-러 간 양자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최종 동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따라 당초 열리기로 했던 주요국 회의는 취소됐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결의안이 상정됨.
- 전문과 35개조로 구성된 초안은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으며, 결의안 1718호와 지난 4월 13일 의장성명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한다”면서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음. 결의안은 또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핵무기 추구를 통탄한다”며 “핵확산금지를 위한 국제 체제는 유지돼야 하며 북한은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에 따른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됨.

● 보즈워스 “北 침공·정권전복 의도 없다”(6/10)

- 미국은 북한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간 노력의 하나로 양자 대화와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으며, 북한을 침공하거나 무력으로 정권을 바꾸려는 의사는 전혀 없다고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9일(현지시간) 밝힘.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만찬의 기조연설에서



-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북한의 최근 행동은 우리의 방위 태세와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옵션을 포함하는 새로운 대응에 관한 고려 대상을 넓히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북한이 미국에 의한 위협 또는 적대정책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와 반대로 우리(미국)는 북한을 침공하거나 무력으로 정권을 바꿀 의도가 없고 이는 북한에도 반복적으로 명백하게 전해졌다”고 강조함. 보즈워스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행동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다른 대화 파트너들은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와 심각한 협상을 하는데 열려 있고 미국은 다자간 노력의 하나로 양자 대화 및 협상에도 나설 용의가 있다”며 북한 측에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함.
 -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견해가 다른 국가들과 직접 대화할 의지를 표명해왔고 이는 북한에도 직접 전달됐다. 특히 6자회담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어가고 양자 대화를 지속하고 비핵화 및 정상적 관계를 위한 노력을 할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신호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북한에 대한 실망감도 표시함.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의 핵 위협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및 광범위한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며 “미국은 우리와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것을 할 것”이라고 방위동맹 실천 의지를 밝힌 뒤 이제 “선택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함.
 - 그는 “북한은 동굴의 어둠 속에 머물 수도 있고 국제사회의 불빛 속으로 나올 수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밖으로 나와 국제사회에 합류할 날을 환영할 것이고 북한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합류할 수 있는 합당한 행동을 할 것을 주문함. 보즈워스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근본적인 목표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고 이런 목표를 바꾸게 할 상황도 상상할 수 없다”며 최근의 어려운 상황이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설명함.

● “北붕괴시 3대작전 이행 중요” <美전문가>

-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 미국은 주요하고 직접적인 역할을 준비해야 하며, 특히 핵물질 위치 파악 및 확보 등 3대 임무를 포함한 작전의 기본 개념을 한국, 중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한런 선임연구원은 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붕괴 시나리오’라는 글을 통해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핵물질의 위치 파악 및 확보 ▲무정부 상태인 북한의 질서 회복 및 북한군 잔류세력의 공격 격퇴 ▲북한 주민에 대한 기본 생필품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등을 미국이 미리 준비해야 할 3대 임무라고 밝힘.



- 그는 북한의 붕괴 과정에서 핵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악몽이라면 핵물질 위치파악 및 안전한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음. 또 한국군과 미군이 협력해 북한의 무정부 상태를 종식시키고, 북한군의 일부가 정권 붕괴 과정에서 한국을 공격할 경우 이를 격멸시키는 한편 북한 고위 지도부를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함.
- 오헨린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와 관련해 미국이 직면할 4가지 주요한 과제 중 첫번째로 3대 임무를 포함한 주요 작전에 대한 확고한 개념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함. 그는 핵무기 안전확보를 위해 유사시 북한 내의 육·해·공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함. 아울러 북한의 핵물질 확보를 위해 미군 특수부대가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유사시 특수부대의 신속 투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 부대와 한·미가 타협도 해야 한다고 말함. 그는 또 ▲동맹국들과 작전 부담을 나누고, 상황에 따라 작전의 조정도 이뤄져야 하며 ▲북한 붕괴시 한·미 연합군과 중국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중국과 고위급에서 집중적인 협의체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와 함께 그는 중국, 한국과 함께 북한 붕괴 후 외국군의 주둔 문제를 어떻게 할지도 원칙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상황 발생시 중국의 북한 진입을 막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함.

● 美, 北 핵보유국 추진 대책수립 착수(6/10)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연쇄 미사일 발사 등 잇단 호전적 도발행위가 핵보유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고 시사주간 타임이 9일 보도함. 타임은 이날 인터넷판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4개월간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보여준 호전적 행위와 군사정전협정 불인정 선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미국 언론인 납치 등의 행위는 김정일이 단순히 서방세계의 관심과 양보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적 행보를 걸으려는 포석으로 보고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보도함.
- 특히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미 정부 대표단이 지난주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를 순방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차원의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협의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북한이 협상의 길을 폐기하고, 핵보유 강국으로 나가기로 전략적 결단을 내렸을 경우에 대비해 3국간의 대응방안을 협의하려는 목적도 있었음.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우리는 이제 북한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려는 시도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위해 소란을 일으키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으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고 말함.



- 미 정부 대표단은 특히 한·중·일 3국 순방과정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나가려는 전략적 결정을 했을 경우에 미국과 3국이 취할 ‘공세적 방어조치’에 관해서도 집중 협의를 함.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돈줄을 쥐고 있는 중국은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와 관련, 아주 신중한 자세 속에서 점진적으로 압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택했고, 북한이 핵보유국을 추진할 경우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평양의 최근 움직임에 우려하면서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도 함께 우려하는 입장을 보임.
- 이와 관련,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협상이 어떤 형식으로 재개되든지간에 과거와는 다른 형태를 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3국에 전달했고, 이는 미국은 같은 말(馬)을 두번씩이나 사지는 않을 것이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언급에 잘 나타나있음. 김정일의 의도와 관련해 건강악화와 후계구도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후계자로 지명된 삼남 김정은 체제를 확고히 다지는 차원에서 군사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란 해석과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다 미국의 침공을 받은 이라크와 외교적 압력에 개의치 않고 있는 이란중 어느쪽이 됐든 북한으로서는 호전적 자세가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타임은 지적함.

● 미국방부 “대북 추가방어조치 강구중”(6/9)

- 미국은 8일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추가적인 방어적 조치들(additional defensive measures)을 강구중이라고 밝힘.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런 길을 계속 갈 경우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빈틈없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정책팀에 과제를 맡겼다”면서 이같이 말함. 그는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추진하는 동시에 우리는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 및 중국 등과 북한이 무모한 이런 길을 계속 갈 경우에 대비한 추가적인 방어 조치와 빈틈없는 계획들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함. 하지만 그는 게이츠 장관이 지난주 싱가포르 방문길에도 추가적 방어조치를 언급했음을 상기시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밝힘.
- 그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의 한·중·일 방문 결과와 관련, “(추가적인 방어조치들에 대해) 특히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3자(공동대응)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의사에 매우 고무돼 돌아왔다”면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3자 차원에서 협력하는 역사적 기회”라고 말함. 모렐 대변인은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강경언급 이후 군사적 방안이 검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외교적, 경제적 압박에 우리의 초점이 계속 맞춰질 것 같다”고 말함.



● “美, 中도움받아 北화물수송 차단 검토” <NYT> (6/8)

-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무기나 핵기술 수송이 의심되는 북한의 해상 및 항공 화물을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이 8일 보도함. 중국 같은 나라의 항구나 비행장에서는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해상에서 할 경우 더 위험한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북한 화물운송 차단에 대한 언급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나옴.
- 타임스는 중국이 북한이 이익을 낼 수 있는 무기거래를 막는 데 있어 미국을 얼마나 도와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전함. 신문은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화물수송 차단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전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해체에 실패한 것과 비교할 때 새롭고 훨씬 더 강력한 접근법을 택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함.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전에 폐기하기로 약속했던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는 데 대해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측근들이 밝힘.
- 타임스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국가안보팀이 지난 16년 간 미 정부의 대북정책 근간이 돼온 “석유와 원자력발전소, 돈, 식량, 체제보장을 제공하면 북한이 궁극적으로 소형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렸다고 전함.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중국 방문에서 이런 우려를 감안, 북한을 제재하지 못하면 이 지역에 미군 증강과 일본의 무기개발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국을 설득함. 클린턴 장관은 방송에서 “우리는 북한 화물수송을 차단하고 돈을 흐름을 끊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금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동북아에서 누구도 원치않는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경고함.

나. 미·북 관계

● “美정보당국, 김정운 후계지명 확인” <폭스뉴스> (6/13)

- 미국 정보당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3남인 김정운을 지명했다는 그간의 보도와 관측을 처음으로 사실로 확인했다고 폭스뉴스가 12일 보도했음. 미 행정부 관리들은 지난달 중순 북한의 후계구도가 김정운으로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한달 가까이 “추측성 언론보도일뿐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음. 그러나 미 정보당국은 북한 내부에서 오간 교신과 문건 등을 확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방송은 전했다.
- 미 정보당국은 김정운 후계확정과 관련해 북한군 내부에 시달된 지시 및 북한 재외공관이 김정운의 후계지명을 축하하면서 ‘충성서약’



을 한 전문을 중간에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군부 지도자들은 지난 3일 “북한 군대 및 주요 군사기관 내부에서 정운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긴 6가지 말씀요지를 하급 간부들에게 시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임.

- 설득요지들 가운데는 “김정운은 군사적으로 천재이며, 장군님(김정일)의 후계자”라고 치켜세우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美 “대북제재 적극이행,방어조치도 취할 것”(6/13)

- 미국은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채택과 관련, 적극적인 이행을 다짐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북한은 지구상의 어떤 것보다 다른 차원의 제재체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제재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크롤리 부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보리의 이사국들과 우선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상원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적절한 방어적 조치들도 취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하지만 협상을 위한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북한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이 과정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했음. 그는 이번 대북결의를 “조심스럽게 목표가 맞춰진 제재들”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우선 초점이 맞춰졌음을 지적했음.

● “오바마, 고어 또는 리처드슨 저울질”<로이터>(6/10)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상태인 미국 국적의 여기자 2명에 대한 석방 교섭을 위해 앨 고어 전 부통령 또는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 보도함. 오바마 대통령의 참모들은 북한에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로라 링과 유나 리 기자의 석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막후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통신은 이같이 전함.

● “여기자 석방위한 정치·경제적 양보안돼”<WP>(6/9)

-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9일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적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미국 정부가 몸값으로 북한에 정치, 경제적 양보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신문은 이날 ‘인질’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독재자는 새로운 지원이 필요하거나 북한 내부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위기 조장을 일삼아왔다”며 이같이 밝힘. 신문은 “이들 여기자와 같이 인도적인 고려를 해야하는 사안의 경우, 석방을 이끌어내기 위한 특사파견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며, 논리적으로 (여기자들이 소속된) 커런트 TV의 공동설립자인 앨 고어 전 부통령을 (특사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신문은 “그러나 정치, 경제적인 양보를 해서는 안되며, 대신 부시 정권이 한때 구사했던 것처럼 북한 정권을 금융측면에서 옥죄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금융제재 필요성을 제안함. 워싱턴포스트는 또 “중국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엔 제재를 지지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국제지원단체 활동가들이 탈북여성들을 도울 수 있도록 (북·중) 접경지역의 통제를 느슨하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중국이 발신한다면 김정일은 이를 견뎌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함.

● 빅터 차 “北, 여기자 협상카드 아닐것”(6/9)

-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8일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12년 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북한이 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것이라는 대부분의 전문가 분석에 이견을 보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그는 이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코리아 체어’ 자격으로 보낸 이메일을 통해 “대부분의 분석과는 반대로, 여기자 문제가 핵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거나 이들 두 명의 여기자가 협상 카드로 억류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힘.
- 그는 대신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끌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반대하는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북한이 이번 사건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그는 “이들 두 명에 대해 가혹한 선고를 함으로써 북한은 탈북자에 대한 보도나 탈북을 고무하려는 국제사회의 시도에 억지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분석함.
- 그는 북한이 김정일의 아들 중 한명에게 권력을 세습하려는 현 시기에 주민들이 망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추정함. 그는 이들 여기자가 소속된 미국 커런트TV를 만든 앨 고어 전 부통령을 석방교섭 특사로 북한에 보낼 것을 거듭 주장함. 그는 “북한은 체면을 크게 원하고 있는데, 고어급의 인물을 보내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인도적 사절일 것”이라고 말함.

● “美, 고어 등 방북 이미 北에 제안”(6/8)

- 북한에 억류상태인 미국 국적의 여기자 2명에 대한 석방 교섭을 위해 미국 정부가 앨 고어 전 부통령이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 방안을 이미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 CNN방송은 8일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전함.
- CNN은 “고어 전 부통령이나 리처드슨 주지사를 기자 석방을 위해 (북한에) 보내는 아이디어를 북측에 제안했다고 미 행정부의 일부



고위 관계자들이 말했다”고 보도함. 방송은 “아직 아무런 답은 오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재판이 종결된 만큼 이들 기자의 석방을 담보하기 위한 고어 전 부통령이나 리처드슨 주지사의 방문을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전함. 하지만 방송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미국이 고어 전 부통령 등의 방북을 북측에 제안했는지 등은 전하지 않음.

● “클린턴, 北에 여기자 석방촉구 서한”(6/8)

- 클린턴 장관은 이날 ABC방송의 대담프로그램인 ‘디스위크’에 출연,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서한을 보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고개를 rM떡이면서 “우리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행동을 취해왔다”며 서한전달 사실을 시인함. 클린턴 장관은 서한에서 여기자 2명이 국경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간 것을 대신 사과하며, 석방을 호소했다고 ABC방송은 전함.
- 방송은 “이(서한발송)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 사이에 이뤄진 최고위급 접촉”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일이 북한의 최근 핵실험을 둘러싼 국제적인 대치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함. 클린턴 장관은 또 “우리는 (북측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지만, (북한에서) 누가 이런 결정(석방결정)을 내리게 될지, 또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 클린턴 장관은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가 미국이 북한과 갖고 있는 정치적 이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출된 우려들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행에 조심해 왔다”며 “이는 (북한 핵실험 등과) 별개의 문제인 인도적 이슈”라고 강조함. 클린턴 장관은 대담에서 서한발송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북한으로부터 ‘응답(responses)’을 받았다고 말해 이미 ‘서한 왕래외교’가 이뤄졌음을 시사함.

다. 중·북 관계

● “중지도부, 대북정책 변화 움직임” <美전문가>(6/13)

-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을 바꿔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찰스 프리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중국실장이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했다. RFA에 따르면 프리먼 실장은 12일 CSIS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중국이 그동안 북한과 관련해 고수해 온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 추구’와 ‘타국의 내정 불간섭’이라는 외교 원칙을 바뀌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최근 중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본 결과, 중국의 최고위 지도자들 사이에서 북한의 현재 상황, 특히 북한의 위협으로 중국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북한의 체제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



다는 일치된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음.

- 그는 이어 “중국 지도자들은 단순히 6자회담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한다고 해서 지역의 안정을 증진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한마디로 현저한 변화”라고 지적했음.
- 프리먼 실장은 중국 입장이 변화한 대표적 사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찬성한 점을 꼽으면서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동의함으로써 오랫동안 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뤘은 북한의 내정 불간섭이란 원칙의 선을 넘어버렸다”고 말했음. 그는 결의안의 일부 문항이 원안보다 완화됐다는 강연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문구 사례를 꼽지는 않은 채 “채택된 결의안에는 북한에 타격을 주는 문구가 상당히 많다”고 반박했음.

● 中 “中-北 교류 정상 진행”(6/11)

- 중국은 11일 북중 교류가 잠정 중단될 것이라는 분석과 관련, 북·중 간의 교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부인함.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평화공존 5개 원칙의 기초 위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중국 외교정책의 기초인 ‘평화공존 5개 원칙’은 주권 및 영토 상호 존중, 상호 불침략, 내정 불간섭, 평등 및 상호 이익, 평화공존임.
- 친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설명하고 “중국과 북한 간의 정상적인 교류가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함. 북한 핵실험 직후 중국이 친즈리(陳至立)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의 방북 계획을 전격 취소하면서 북·중 교류가 잠정 중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음.

라. 일·북 관계

● “日 자위대, 북한 화물검사 정보제공 한정”(6/14)

- 일본 정부와 여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874호에 따라 실시하는 화물검사와 관련, 해상자위대의 활동은 수상한 선박 등의 정보 수집에 한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4일 보도했음. 정부와 여당이 화물검사를 위해 제정을 검토 중인 특별조치법안은 해상보안청이 일본 영해 내와 일본 주변 공해상에서 화물검사를 하되 공해상에서는 선박 소속 국의 동의를 얻고, 승선은 선박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무기 사용은 근무자 및 함께 직무에 임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돼 있음.
- 반면, 해상자위대는 P3C 초계기 및 호위함을 통해 수상한 선박의 동향을 감시하도록 할 방침. 수집한 정보는 해상보안청이나 화물 검



사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 함선 등에 제공하도록 할 계획. 이는 해상 자위대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경우 북한과의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 일각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는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특별조치법에는 포함하지 않고 통상적인 부대 활동의 일환으로 수행할 방침임.

● “日, 北 장거리미사일 발사시 요격 검토”(6/9)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재차 발사할 경우에 대비,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의한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9일 보도함. 일본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지난 4월 로켓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상공을 다시 통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영해와 육지 등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한 요격명령을 발령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함.
- 일본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일본 열도를 사정에 넣고 있어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북한이 의도적으로 일본에 발사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또 동해상에 낙하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격 명령은 보류할 것이라고 신문은 밝힘.

● 日총리 “싸울 땐 싸워야”(6/8)

-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 “우리는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고 지난 7일 오후 말해 논란이 예상됨. 8일 도쿄(東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는 도쿄도 무사시노(武藏野)시에서 가진 거리연설에서 “(북한이) 핵폭탄을 갖고 있고 이를 운반할 능력도 있다. 그것을 적국인 일본에 쓸 의사가 있다고 본인(북한)이 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그런 나라가 이웃에 있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국가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자민당은 그런 각오로 일을 해 나가려 한다”고 주장함. 이는 민주당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싸움을 거론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북한의 반발은 물론 국내에서도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높음.

마. 기타

● “北도 신종 플루 발생 가능성 크다”<WHO>(6/13)

-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에서 인플루엔자 A(H1N1.신종 플루)에 감염된 사례는 12일 현재까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지만, 신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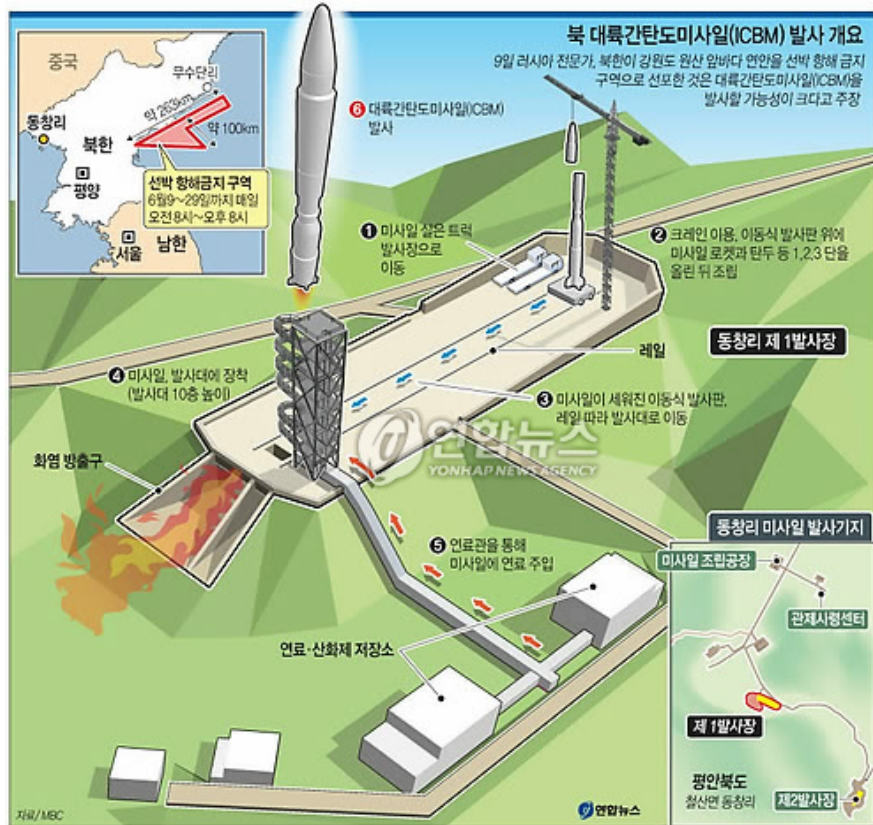


● “김정운, 국방위 행정국 소속” <日 신문> (6/10)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부각된 그의 3남 정운(26)씨가 북한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의 행정국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한반도 정세에 밝은 정보 당국의 주장이라면서 10일 보도함. 정운씨는 현재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 동행하는 등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으며 그가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것은 후계준비를 급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함.
- 아울러 신문은 2남인 정철(27)씨는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에 따라 국방위원회가 조선노동당의 상부 기관이 된다면 정운씨가 서열상 상위가 된다고 신문은 지적함. 정보 당국에 따르면 정운씨는 지난 4-5월께 국방위원회에 들어갔다. 행정국의 임무는 불명확하지만, 조직상 행정국장은 조선인민군 간부인 이명수 대장(72)의 부하인 것으로 전해짐.
- 이 대장은 인민군 총참모장 등을 거친 군내 서열 3, 4위의 간부로 1996년부터 김 위원장을 수행해 온 측근임. 김 위원장은 올해 들어 군 방문과 공연 관람 등 현지 시찰을 월평균 10차례 하고 있으며 정운씨가 간부와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다른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정운씨는 약 5년 전부터 김 위원장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짐. 직함은 ‘국방위원회 지도원’이라는 정보도 있다고 신문은 전해짐.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 않으나 국방위원회의 규정을 변경, 종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서의 역할 이외에 세습 준비를 위한 상설기관의 역할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신문은 주장함.

● “北 선박항해금지 ICBM 발사징후” <러 전문가> (6/9)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국제관계·국제경제연구소 게오르기 톨레라야 박사는 9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 앞바다 연안을 선박 항해 금지구역으로 선포한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함. 톨레라야 박사는 이날 러시아 관영 이타르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북한의 그런 행위는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특히 “이는 조만간 도출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제재안 채택을 전후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함. 또 톨레라야 박사는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이날 “북한의 핵역지력은 강력한 방어수단이자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정의의 보복타격을 가할 무자비한 공격수단”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전해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주의제는 북한문제”(6/13)

- 로버트 기브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내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는 북한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브스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주 화요일(16일)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 기브스 대변인은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지난 G-20 정상회담 당시 이 문제와 관련해 얘기를 시작했고, 아마 이번에도 대화를 계속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G-20 정상회담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와 관련된 일부 우려사항을 언급했다”고 상기시키면서 “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 <6.16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전망>(6/9)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6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간 첫 정상 방문을 통한 공식 만남이라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음. 두 정상은 지난 4월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으나 실질적 의미에서 양자회담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임. 특히 최근 북한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두 정상이 이에 대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이 대통령은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합의한 양국간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머리를 맞댄다는 계획임. 이와 관련,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을 글로벌 수준의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의 ‘한·미동맹 미래비전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짐. 이는 군사, 안보 부문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게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 또 테러 대응,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 등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나 최근 논란이 된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공식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함.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북한 문제.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을 명백한 ‘도발행위’로 규정, 강도높게 규탄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미국의 ‘대(對)한국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 핵실험을 통해 의도적으로 국제사회에 핵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대해 유사시 핵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셈임.
- 또 북한 핵실험 이후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검토 필요성과 관련, 정상회담의 공식의제에서는 제외됐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최근 들어 다시 논란이 되는 미화 100달러짜리 위폐인 ‘슈퍼노트’ 유통, 미국 여기자 억류, 현대아산 직원 억류, 개성공단 등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임.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에 관해서도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됨.

● <인터뷰>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소장(6/9)

- 고든 플레이크 미국 맨스필드 재단 소장은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실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일련의 도발행위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한반도 전문가인 플레이크 소장은 9일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지금처럼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 공조가 잘 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함.
- 플레이크 소장은 한·미 양국 간 의회비준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일단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만 나와도 성공적일 것”이라며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음. 다음은 플레이크 소장과의 일문일답.
 - 한·미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는가.
 - ▲북한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국에서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해 왔기 때문에 매우 새로운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한·미 정부가 내뱉던 대북 메시지에 대한 재확인과 한·미 공조를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면 대북문제가 ‘문제점’이었으나, 지금은 동맹 사이를 가깝게 하고 공통점을 찾게하는 ‘매개’가 되고 있다.
 - 과거 한·미 관계와 이에 따른 대북 대응이 어떻게 다르다는 뜻인가.
 - ▲지난 2006년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에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몰아붙였다. 심지어 부시 정권 내부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결국 부시 정부는 대북정책을 바꿔야 했다. 약 3년이 흐른 뒤 올해 2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미국 내에서 누구도 이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이다. 또한 한국 쪽에서 보면 3년 전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유엔을 통한 강경대응에도 소극적이었다. 지금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추가 핵실험 이후 한국, 미국이 일본과 더불어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정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같은 입장으로 끌어들이 정도로 한·미 간의 공동보조가 눈에 띈다.
 -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대북 독자제재 방침을 천명할 가능성은 있나.
 -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논의결과 등을 고려한 뒤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각각의 독자제재 문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론될 수도 있을 것이다.
 - 한·미FTA와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
 - ▲그러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긍정적 측면에서 언급이 된다면 그것으로도 성공적일 것이다. 제너럴모터스와 크라이슬러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너무 높은 기



대를 갖는 것은 안된다. 한·미동맹 관계의 ‘남은 과제’ 정도로 인식한다는 양국 정상의 언급 정도가 있지 않을까 본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요구를 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특히 군사적인 지원문제와 관련해 압력을 넣는 듯한 얘기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군대가 가지 않더라도 한국이 많이 기여할 수록 좋기는 하다. 한국이 현명하다면 먼저 미국에 대해 제의를 하는 게 나을 것이다.

--전작권전권 이양문제에 대한 한·미정상의 의견교환 가능성은.

▲이미 협상이 끝난 문제이기는 하지만,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협상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했던 협상 범위에서 이양의 시기와 관련해 사정상 스케줄을 조정하는 일은 가능한 일일 것이다.

● RFA방송 “韓, 美에 대북특사 보류 요청”(6/9)

- 미국이 북한에 억류된 자국 여기자들의 석방문제 논의를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하려던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고려, 일정을 보류해달라고 지난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함. 방송은 ‘서울에 있는 외교 소식통’이 “지난 주 미국의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일행이 한국에 왔을 때 미국측이 앨 고어 전 부통령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한국측에 알리자 한국측이 유씨 문제를 거론하며 일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전함.
- 소식통은 “미국인 여기자들 문제를 놓고 북·미간 진척이 있을 경우 소재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유씨 문제가 한국내 여론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미국 정부는 여기자 2명에 대한 북한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즉각 특사 파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여기자에 대한 판결을 늦추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보류하게 됐다고 RFA는 주장함.

● “한반도 배치 美공군 항공기 100여대”(6/8)

- 한반도에 배치돼 있는 미국 공군 항공기는 전투기를 주축으로 100여대에 이른다고 주한미군 관계자가 8일 밝힘. 이 관계자는 이날 “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 등 주한미군 소속 전투기가 4개 대대 80여대에 달한다”며 “순환배치 차원에서 한반도에 배치된 항공기까지 합하면 모두 100여대의 미 공군 항공기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함. F-16과 A10 공격기의 1개 대대는 12~24대로 구성되어 있음.
- 순환배치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개된 항공기는 미국으로 철수한 아



파치 헬기 24대를 대신한 F-16 14대와 U-2 고공정찰기 등 20여대에 이릅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공군의 항공기 전투 전력이 지난 4년간 25%가량 축소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주한미공군 전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2만8천500명 수준에서 유지기로 한 주한·미군의 전력 역시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 그는 “최근 북한의 도발 움직임과 관련해 한·미연합사가 위치곤을 상향 조정하는 등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간 강력하고 긴밀한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나. 한·중 관계

● 한·중 6자수석, 북핵 문제 협의(6/10)

-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10일 베이징에서 양자회담을 열어 북핵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짐. 9일 중국을 방문한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2시간 동안 회담을 갖고 핵실험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함.
- 베이징 소식통들은 “위 본부장과 우 부부장이 예정된 시간보다 긴 2시간가량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면서 “양국 대표는 북핵 정세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국 수석대표들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국 측 역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방안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최근 미국 등 서방 진영의 절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조만간 대북 제재 결의안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됨. 양국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후계자 문제 등 최근 내부 동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짐. 그러나 애초 예정된 위 본부장의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여간簾>) 중국 외교부장 예방 일정은 중국 국무원이 긴급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성사되지 못함.
- 위 본부장은 오후에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류홍차이(劉洪才) 부부장과도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해 협의함. 류 부부장 역시 위 본부장에게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필요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베이징 소식통들은 “이번 회담은 급변하는 북핵 정세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 도출을 앞두고 양국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함.



다. 미·중 관계

● 中 “美, 관타나모 수감 위구르인 中에 돌려보내야”(6/11)

- 미국 정부가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된 위구르인 17명을 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에 정착시키기로 하자,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기자들을 만나 “미국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위구르인들이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테러 용의자들을 제 3국으로 인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힘. 그는 위구르인들을 ‘테러 용의자’라고 지칭하면서, 중국 정부는 제 3국이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함.
- 친강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의 결정에 대해 중국이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앞서 팔라우의 존슨 토리비옹 대통령은 10일 성명을 발표, “관타나모에 수감된 위구르인들을 최대 17명까지 팔라우에 임시로 정착하게 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음.
- 미국-팔라우간 합의에 따라 팔라우에 임시로 정착하게 될 위구르인들은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의 무장 세력 훈련 캠프에서 무기 관련 훈련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1년 체포된 뒤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됨. 이후 미 국방부는 이들이 ‘적 전투원(enemy combatant)’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미 연방법원도 지난해 이들을 석방하라는 판결을 내림. 그러나 미국 정부는 위구르인들을 모국인 중국으로 송환할 경우 중국 사법당국이 이들을 신장 위구르 자치구 분리 독립운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고문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며 위구르인들의 제 3국행을 모색해 옴. 팔라우는 1994년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는 등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중국 대신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음.

라. 미·러 관계

● 러시아, 미국의 MD 참여 제안 거부(6/12)

- 러시아는 11일 유럽에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함.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폴란드에 요격 미사일 10기를 배치하고, 체코에 레이더 기지를 세우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아무리 기발한 구상이라고 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그는 그러나 러시아가 여전히 미국과 타협하는 방안을 찾기를 원한다면 “미국이 유럽에 MD 시스템을 세우려는 계획을 버리는 것만이 우리가 미사일 위협에 공조하는 문제를 놓고 긴밀히 대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 9일 이란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데 따라 러시아가 레이더나 정보 교환 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음. 한편, 러시아는 국제 테러와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과의 공조를 확대할 준비가 돼있다고 러시아 대통령궁 고위급 관계자가 11일 밝힘.

- 아나톨리 사포노브 러시아 대통령궁 최고 특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다음달초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이 양국이 테러와 싸우고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협력을 증진 시킬 것이라고 말함. 사포노브는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로 마약이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는 마약 밀매를 뿌리뽑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서방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과거 “이중 잣대”라는 걸림돌 때문에 방해 받았다면, 미국의 새 행정부와 관계를 증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그는 “세계는 점점 취약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미국 지도부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간 우리가 쌓은 성과를 지키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함.

● “핵탄두 1천500개 이하 감축 안 돼”(6/10)

- 러시아와 미국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 전략 미사일을 총괄하는 고위 군 장성이 핵탄두 1천500개 이하 감축은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됨. 러시아 전략미사일 부대 니콜라이 솔로브초프 사령관은 10일 인테르팍스 통신 등과 인터뷰에서 “적어도 1천500개의 핵탄두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최종 결정은 양국 정치 지도자들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힘.
-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오는 12월 시한 만료되는 START-1 후속 협정 마련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지난달 19일과 지난 1일 각각 모스크바와 제네바에서 두 차례 본협상을 가짐. 양국은 2002년 두 나라 정상이 서명한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SORT)에서 핵무기 수를 1천700~2천200개 수준으로 줄이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이보다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협상하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양국은 핵탄두만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이나 전략 폭격기 등의 발사 수단(운반로켓)도 감축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양국은 이달 중순 한 차례 또 협상을 벌인 다음, 그 결과를 다음 달 6~8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앞서 니콜라이 마카로프 러시아 총참모장은 지난 5일 미국이 유럽 미사일 방어(MD) 계획 추진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전에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포함해 세계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핵 잠재력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전략 핵전력은 우리에게 신성한 것”이라고 말함. 미국은 체코와 폴란드에 미사일



방어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인데 러시아는 자국 안보에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이 방어망이 이란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

마. 중·일 관계

● 아소, 中에 북핵 문제 협조요청(6/8)

-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는 8일 중국의 왕치산(王岐山) 경제 부총리를 접견하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북핵 폐기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함. 이에 대해 왕 부총리는 “북한 문제는 관계국들 사이에 돌출된 문제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짐.
- 왕 부총리는 전날 도쿄(東京)에서 열린 중·일 양국 고위급 경제대화 참석차 일본을 방문함. 아소 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동중국해의 가스전 공동개발 문제와 중국의 냉동만두 농약중독 사건 등에 대해 진척이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왕 부총리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게 전달하겠다고 언급하는데 그침.

바. 일·러 관계

● 러-日, 북방영토 영유권 분쟁 악화(6/12)

- 러시아와 일본 간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이 악화되고 있음. 러시아 외무부는 11일(현지시간) 대변인 성명을 내 “일본이 북방영토 반환에 관한 법안을 의회에서 처리한 것은 적절치 않으며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밝힘. 이날 성명은 이날 일본 중의원이 북방영토를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선언하면서 영토 반환과 관련한 법을 개정할 데 따른 것임.
-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북방영토가 2차 대전이 끝나고 합법적 근거에 의거 러시아에 넘겨졌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결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해 북방영토 반환 가능성을 배제함. 북방영토는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를 잇는 20개 도서 가운데 최남단의 에토로후(擇捉)와 구나시리(國後), 홋카이도 북쪽의 하보마이(齒舞)와 시코탄(色丹) 등 4개의 섬을 말함.
- 1905년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차지했다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러시아로 넘어갔으며 이후 러시아가 실효 지배를 해 오고 있음. 지난 1956년 일·소 공동선언에서는 평화조약 체결 후 하보마이와 시코탄 2개 섬을 일본에 인도한다고 명기한 바 있음. 그러나 1993년 양국의 도쿄선언에서는 영토문제가 이들 4개 섬의 귀속문제라는 점을 확인, 4개 섬 전체에 대한 처리 문제로 확산하면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소련의 유산을 물려받은 러시아는 2개 섬 이상은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4개 섬 모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특히 아소 총리는 지난달 말 일본 기자들에게 “(구소련 이래)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해 러시아의 반발을 사기도 함.

사. 기타

● 濠 ‘아·태공동체’ 구상에 美 거부감(6/12)

- 호주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아시아·태평양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제의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거부감을 표시하고 나서 주목됨.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지난 11일 “호주 정부의 아·태공동체 설립계획은 유럽과 아시아를 비교하는 데 거부감을 갖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반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12일 보도함.
- 캠벨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 “아시아에서 다자간 외교는 아직도 ‘피상적인’ 수준”이라며 “아·태공동체 설립이 성공하려면 보다 깊게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말함. 그는 오히려 호주보다는 미국이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지난해 6월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을 포괄하는 지역공동체의 설립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었음.
- 이에 따라 고위 외교관 출신인 리처드 울코트를 전담자로 임명해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 기타 아·태지역 각국을 대상으로 지역기구 설립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도록 함. 러드 총리는 “호주가 구상중인 아·태공동체는 아무래도 EU 모델을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그는 지난달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회의에 참석, “오는 2020년까지 아·태공동체를 설립할 것”이라며 “각국 정부의 이해를 구하는 등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함.

● 濠-中, 리오턴토 인수무산으로 마찰 조짐(6/12)

- 중국의 글로벌 철광석업체 리오턴토 인수 무산으로 중국과 호주간 통상마찰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중국 정부는 국영 차이나일코의 호주 리오턴토 인수 무산직후 호주의 BHP빌리턴과 리오턴토가 합작사를 설립하겠다고 합의한 것과 관련, 이 회사가 중국 공정경쟁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무역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베이징발로 12일 보도함.
- 중국국영TV는 지난 11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BHP빌리턴과



리오틴토는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중국 공정경쟁당국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무역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중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반독점법은 해외 기업들의 합작회사 설립이 중국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만일 승인거부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을 강행한다면 무역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힘.

- 중국 철강석생산업체들은 리오틴토 인수 무산과 BHP빌리턴과 리오틴토의 합작사 설립방향을 놓고 철광석생산 독점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음. 또 호주 투자를 고려중이거나 투자에 나선 업체들은 호주 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분위기임. 이에 대해 호주 정부는 리오틴토 인수 무산은 전적으로 경영 측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부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나섬. 사이먼 크린 호주 무역부장은 “리오틴토 인수 무산 과정에서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함. 호주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정부가 리오틴토 인수 무산에 대해 무척 화를 내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함.

● 美, 키르기스스탄에 ‘협력’ 서한(6/11)

- 키르기스스탄 내 미 공군기지 폐쇄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키르기스스탄에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촉구하는 친서를 보냈다고 바키예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이 성명을 통해 11일 밝힘. 성명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 정부에 보낸 친서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촉구하면서 미국 정부 고위관료로 구성된 대표단을 키르기스스탄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함. 성명은 마나스 공군 기지를 언급하지는 않음.
- 하지만 마나스 기지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서한은 마나스 기지의 사용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언급했다”고 말함. 이와 관련 비슈케크 주재 미 대사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것은 맞지만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함. 그러나 사르바예브 키르기스스탄 외무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키르기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지지하겠지만 지난 2월 확정된 마나스 기지 폐쇄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말함.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2월 미국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병참기지로 활용해 온 마나스 미 공군기지에서도 6개월 이내에 철수할 것을 요구함.

● 캄보디아, 베트남과 국경선 획정작업 완료 합의(6/11)

-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오는 2012년까지 국경선 획정작업을 마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함. 이번 합의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캄보디아의 시엠레아프에서 양국 외교부 차관급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양국 간의 합동국경위원회 회담 결과 나온



것으로, 양국은 상호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는 2012년 까지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신화는 전함.

- 캄보디아는 베트남과 동쪽으로 1천200km의 국경을 함께 하고 있으며, 109개의 국경 표지판을 설치 운영 중임. 이와 관련해 바르 김홍 캄보디아 수석대표는 오는 2012년까지 205개의 표지판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힘. 캄보디아는 또 태국과는 서쪽으로 850km를, 북동쪽으로는 라오스와 504km의 국경을 각각 함께 하고 있음.

● 푸틴 “다른 나라 하면 우리도 핵무기 포기”(6/10)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10일 미국 등 다른 국가가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러시아도 똑같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관영 뉴스통신 리아 노보스티가 보도함. 푸틴 총리는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핵폭탄을 제조하거나 사용한 나라들이 그것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환영하며 따라 할 것”이라고 말함.
- 지난 4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만나 오는 12월 시한 만료하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 재개에 합의했고 이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음. 이와 관련, 현재 양국은 감축할 무기의 숫자와 대상 등을 두고 2차 본 협상까지 진행한 상태며 이달 중순 제네바에서 3차 협상을 벌일 예정이고 내달 6일 오바마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때까지 초안을 마련하기로 함.
- 양국은 2002년 두 나라 정상이 서명한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SORT)에서 핵무기 수를 1천700~2천200개 수준으로 줄이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이보다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협상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필리핀 방산군수 공동위 개최(6/10)

-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0일 서울 용산 방사청 회의실에서 필리핀과 방산군수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힘. 정순목 방사청 차장과 람베르토 실로나 필리핀 국방부 획득시설군수 차관보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군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과 한국군 이양장비에 대한 수리부속 및 정비, 군사지원함 수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임. 방사청은 군용차량과 경(輕)공격기인 KA-1, 155mm 곡사포, 주·야간 조준경 등 방산물자 수출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짐. 한-필리핀 간 방산군수협력 공동위는 1994년 체결된 양국 간 MOU에 따라 연 2회씩 개최되고 있음.

● 후진타오, 러시아등 3개국 순방(6/9)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러시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등 3개국 순방길에 오른다고 중국 외교부가 9일 발표함. 후



진타오 주석은 14일부터 18일까지 러시아 서부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잇따라 개최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연례 정상회의와 '브릭스(BRICS)' 4개국 정상회담에 모두 참석한다고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SCO는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을 회원국으로 지난 2001년 상하이에서 설립된 지역안보 기구이며, 브릭스는 신흥 발전국인 중국, 러시아, 인도 및 브라질 등 4개국으로 구성됨.

-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이 모두 SCO와 브릭스 회원국이며, 브릭스는 이번에 러시아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 주목되고 있음. 후 주석은 오는 18일 러시아 방문을 마친후 슬로바키아와 크로아티아 순방에 나섬.

● 美, 도하협상 회생 노력 본격화(6/9)

-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8일 도하 라운드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인 농업 부문 마찰을 절충하기 위해 개도권 핵심 세력인 인도 및 중국 측과 접촉하는 등 본격적인 협상회생노력에 착수함. 커크 대표는 주요 19개 농업 수출국 모임인 케언스 그룹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날 아난드 샤르마 인도 신임 통상장관과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및 중국 인사들과 잇따라 만남. 커크-샤르마 회동에는 로베르토 아제베도 브라질 WTO 대사도 배석함.
- 아제베도 대사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미국과 인도가 협상 재개를 위한 분명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도 돌파구 마련을 위한 노력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함.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온 핵심 당사국들인 미국과 인도가 앞서 각자의 선거 때문에 접촉을 중단한데 크게 영향받아 결렬된 바 있음. 커크와 샤르마간 접촉은 두 나라 통상 지도부가 새로 구축된 후 처음임.
- 샤르마 장관은 회동 후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후속 협상을 위해 이달 중순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함. 반면 커크는 회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케언스 그룹은 이번 발리 회동에서 보호주의 움직임을 경고하면서 DDA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짐. 한편 존 브루턴 주미 EU(유럽연합) 대사는 8일 워싱턴에서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방인 EU와 캐나다에서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미 의회가 지난 2월 통과시킨 경기 부양책에 바이 아메리칸 규제가 많아 철강과 공산품 등에서 EU와 캐다가 배제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을 갖고 있으나 실상 역효과를 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함. 브루턴은 백악관이 바이 아메리칸 견제를 외치고는 있으나 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



적이라면서 따라서 EU와 캐나다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경고함.

● **한-UAE, 9일 외교장관회담 개최(6/8)**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외교장관은 9일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8일 밝힘. 유 장관과 압둘라 장관은 회담에서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및 한국 기업의 UAE 내 건설·플랜트 시장진출 확대 방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증진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임.

● **한-폴란드, 9일 제1차 경제공동위 개최(6/8)**

- 외교통상부는 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한-폴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힘. 양국은 2005년 발효된 경제협력협정에 근거해 열리는 이번 1차 공동위에서 방위산업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기후변화 대처와 에너지 다변화를 위한 원전·LNG(액화천연가스)·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등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현황을 점검할 예정임.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외교부 이용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폴란드측에서는 마르친 코롤레츠 경제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총리실 및 경제부처 대표단이 참석함.

● **한-멕시코, 4차 고위정책협의회 개최(6/8)**

- 외교통상부는 8일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제4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힘. 권종락 1차관과 루르데스 아란다 베사우리 멕시코 외교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 무대에서의 공조 방안과 신종플루 사태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함. 또 고위급 인사 교류, 경제통상·문화·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주요 양자 현안과 기후변화, 경제위기 극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등 주요 다자 이슈를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고 외교부는 전함.
- 권 차관은 또 이번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파트리시아 에스피노사 칸테야노스 외교장관을 예방, 양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 멕시코 무역흑자가 8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멕시코는 한국에 중요한 시장”이라며 “신종플루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추진된 이번 회의는 앞으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함.

[참고 1] <표> **李대통령 방미 주요 일정 (연합뉴스, 6/9)**

일 정	주요일정
6월 15일(월)	- 출국 - 미국 행정부 주요인사 접견
6월 16일(화)	- 한·미 정상회담.기자회견.오찬 - 상.하원 지도부 간담회 - 한·미 CEO 초청 만찬 간담회
6월 17일(수)	- 조지워싱턴대 명예박사 수여식 및 연설 - 한반도 전문가 초청 오찬 간담회
6월 18일(목)	- 귀국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6/09/0503000000AKR2009060907880001.HTML>
[참고 2] <표> **결의 1718 및 결의안 초안 비교 (연합뉴스, 6/11)**

	결의 1718 (2006.10)	결의안 초안 (2009.6)
북핵실험 규탄 수위	규탄한다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
화물검색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검색을 해야한다고 촉구. 자국 항구는 물론 공해상 검색도 규정
무기금수	장갑차, 전투기, 미사일 등 중화기, 핵관련 물질, 사치품	모든 무기·물자 및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 자문, 서비스(소형 무기 제외)
금융제재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이나 단체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금융거래. 인도적 목적 등의 거래 제외

(뉴욕=연합뉴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6/11/0511000000AKR20090611004500072.HTML>



요구될 수 있는 개인 및 문서, 장비,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해 투명성 조치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9. 결의 1718호 8조 b항의 조치들을 모든 무기들 및 관련 물자는 물론 이런 무기 및 물자의 제공이나 제조, 유지나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나 지원에도 적용할 것을 결정한다.
10. 결의 1718호 8조 a항의 조치들을 모든 무기들 및 관련 물자는 물론 이런 무기 및 물자의 제공이나 제조, 유지나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나 지원에도 적용할 것을 결정한다. 다만 소형 무기와 경화기, 관련 물자는 예외로 하되 회원국들에게 소형 무기 및 경화기를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제공, 판매, 이전하는 것에 경계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더해 회원국들은 북한에 소형 무기나 경화기의 판매, 제공, 이전에 앞서 적어도 5일 전에는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결정한다.
11.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을 오가는 화물이 1718호 8조 a, b, c항이나 이번 결의 9조 및 10조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 조항의 엄격한 시행을 위해 자국의 법적 권한 및 국제법에 맞춰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을 자국의 항구와 공항을 포함한 영토에서 검색할 것을 촉구한다.
12. 모든 회원국들은 공해상에서 선박이 1718호 8조 a, b, c항이나 이번 결의 9조 및 10조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 조항의 엄격한 시행을 위해 기국(旗國)의 동의를 거쳐 해당 선박을 검색할 것을 촉구한다.
13. 모든 회원국들은 11조 및 12조에 따라 검색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기국이 공해상의 선박 검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국은 선박을 각국의 권한에 의해 필요한 검색을 할 수 있기에 적합하고 편리한 항구로 가도록 지시할 것을 결정한다.
14. 모든 회원국들은 1718호 8조 a,b,c항이나 이번 결의 9조 및 10조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을 검색해 결의 1540호(2004년)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들과 NPT, 화학무기금지조약, 화생물무기금지조약 등에 의해 적용되는 의무와 불일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압류 처분할 권한이 부여되고 그렇게 해야 하며 그런 노력에 협력할 것을 결정한다.
15. 어떠한 회원국이라도 이번 결의 11,12,13조에 따라 검색을 수행하거나 14조에 따라 화물을 압류·처분할 때는 검색·압류·처분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즉각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16. 어떠한 회원국도 이번 결의 12, 13조에 따라 기국의 협력을 받아내지 못할 때는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즉각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17. 모든 회원국들은 1718호 8조 a,b,c항이나 이번 결의 9조 및 10조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북한 선박에 연료나 물자 및 기타 서비스와 같은 것을 자국인이나 영토내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을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거나 화물 검색과 압류·처분이 이뤄질 때까지는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 조항은 합법적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18. 회원국들은 1718호 8조의 d,e항에 따르는 의무를 실행하는 것에 더해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 또는 기타 자산 및 자원이 이전되는 것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는 이런 프로그램 및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금융 및 기타 자산 및 자원을 동결하고 회원국의 권한과 법에 따라 이런 모든 거래를 방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19. 모든 회원국과 국제 금융 및 신용기관은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주의 및 개발 목적이거나 비핵화를 증진시키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새로운 공여나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또 회원국은 현재의 금융 활동을 줄이는 쪽으로 경계 강화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 모든 회원국들은 금융지원이 북한의 핵관련 또는 탄도 미사일 또는 다른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북한과의 교역을 위해 공적인 금융 지원(그런 거래에 연루된 자국민이나 기업에 수출 신용, 보증 또는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21.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내 외교 공관 활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식으로 결의 1718호의 8조 a항 iii 호와 8조 d항의 조항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22. 모든 회원국들은 이 결의 채택 이후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 결의의 18, 19, 20조에 규정된 금융조치 뿐 아니라 9, 10조, 그리고 결의 1718호의 8조 조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그들이 취한 확실한 조치들을 채택일로부터 45일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23. 결의 1718호의 8조 a, b, c항에 규정된 조치들이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INFCIRC)/254/Rev.9/Part 1a 와 INFCIRRev.7/Part 2a 에 열거된 항목들에게도 적용된다고 결정한다.



24. 기업과 물품, 개인의 지정을 포함해 결의 1718호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제재위원회는 이 결의 채택으로부터 30일내에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명령하고, 위원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보고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조치를 조정하기 위한 행동을 완료할 것임을 결정한다.
25. 제재위원회는 2009년 7월15일까지 안보리에 제출할 실무 프로그램을 통해 결의 1718호, 2009년 4월13일 안보리 의장성명, 이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촉진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26.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에 첫 1년간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할 7인의 전문가 그룹을 창설할 것을 요청한다. (a) 이 결의 25조에 명기된 기능들과 결의 1718호에 명기된 위임사항들을 위원회가 이행하는 것을 보조 (b) 결의 1718호와 이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들의 이행과 관련해 특히 불이행의 경우 국가들과 관련 유엔 기구들, 다른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 분석 (c) 안보리 또는 위원회 또는 회원국에게 이 결의와 결의 1718호에서 부과된 조치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들을 권고 (d) 이 결의 채택후 90일내에 안보리에 잠정 보고를 제출하고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최종 보고 제출
27. 모든 국가들과 관련 유엔 기구들, 다른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특히 결의 1718호와 이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의 이행에 관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한다.
28. 모든 회원국은 자국민들이, 또는 자국 영토내에서 북한의 민감한 핵 활동 확산과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북한 국민에게 가르치거나 훈련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면밀히 관찰할 것을 촉구한다.
29. 북한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30. 평화적 대화를 지지하고, 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참가국들에게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이 2007년 10월3일 내놓은 합의문과 2005년 9월19일과 2007년 2월13일에 발표된 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31. 이 사태에 대한 평화적이고 외교적, 정치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결의를 표명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광범위한 해결방안을 촉진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어떤 행동도 자제하는 안보리 회원국과 다른 회원국들의 노력을 환영한다.



32. 북한의 행위를 지속적 검토할 것임을 확인하며, 결의 1718호의 8조와 이 결의의 8조, 9조에 포함된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하며, 이는 북한이 결의 1718호를 준수하는 양상에 따라 그 때마다 조치들을 강화, 변경, 정지 또는 해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33. 추가의 조치가 필요해진다면 추가의 결정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한다.
34.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지속키로 결정한다.』

june@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6/12/0511000000AKR20090612004600072.HTML>



[참고 4] <北 외무성 성명 전문> (연합뉴스, 6/13)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북한 외무성은 13일 '위임'에 따라 성명을 발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874호에 대응해 우리나라 농축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조치를 선언했다.

다음은 외무성 성명 전문.

『6월 12일 미국의 사측(사주) 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끝내 우리의 2차 핵시험을 걸고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미국 주도하의 국제적 압박 공세의 또 하나의 추악한 산물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 결의로도 모자라 위조화폐요, 마약밀매요 하는 허구들을 조작해내어 각기 우리 나라에 대한 단독 제재를 더 가하기 위한 비열한 음모까지 꾸미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더욱 깊숙이 끌어들임으로써 조선반도에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첨예한 대결국면을 조성하였다.

이 대결은 한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부정해 나선 미국과 그에 추종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불법무도한 강권행위에 의하여 발단되었다.

미국이 조작해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4월14일부 의장성명에는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으며 오직 제도를 달리하는 나라에 대한 적의와 거부감,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순종해야 한다는 오만과 전횡만이 깔려있다. 우리 나라는 작지만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다.

미국의 강권행위가 용납된다면 우리 공화국은 남들이 다 하는 위성발사를 다시는 할 수 없게 되며 우주이용권리를 영원히 빼앗기게 된다.

우리의 2차 핵시험은 이러한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단행된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자위적 조치이다.

오늘의 이 대결은 본질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관한 문제이며 조미(북한-미국) 대결이다.

자주와 평등을 떠나서 진정한 평화란 있을수 없다.

누구든 우리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핵보유가 결코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으로 인한 불가피한 길이었음을 알고도 남을 것이다.

이제 와서 핵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으며 우리



의 핵무기 보유를 누가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의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 배격하며 미국과의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첫째,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 현재 폐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이상이 재처리되었다.

둘째,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한다. 자체의 경수로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시험 단계에 들어섰다.

셋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제아무리 고립봉쇄하려고 하여도 당당한 핵보유국인 우리 공화국은 꺾덕도 하지 않는다.

제재에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단호히 맞서나가는것이 우리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대응방식이다.』

zoo@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6/13/0511000000AKR20090613047600014.HTML>



[참고 5] <美오바마 정부 출범후 북미간 일지> (연합뉴스, 6/14)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북한은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874호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우리나라 농축 작업 착수를 비롯해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치를 선언했다.

특히 북한은 외무성 명의의 발표 중 격이 가장 높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이 ‘조미(북미) 대결’임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바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미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나타낸 데 이어 출범 직후에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나서 핵보유국간 “핵군축”을 주장했다.

지난 1월20일 취임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적이고 티프한 외교’를 표방하고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과는 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4.5)하자 이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고 북한은 ‘6자회담 불참 및 핵시설 원상복구’를 선언하는 등 대립이 심화돼 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오바마 정부가 부시와 다른 것 없다”며 미국과의 ‘대화 무용론’을 주장한 직후 2차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이 같은 북한의 행위에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보상으로 답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는 등 북미 간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다.

다음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북미 간 일지.

◇2009년

- ▲1.13=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인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1.17= 북한 외무성 대변인 중앙통신 문답, “대미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철두철미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
- ▲1.20 =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 ▲2. 2 =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북미간 “적대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 조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면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
- ▲2. 3 = 미국은 최근 수 주 동안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미 행정부 관리가 언급 - 미 정부는 이날 미사일 및 관련기술 거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활동에 개입해온 북한의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등 3개 회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



- ▲2.14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북핵 완전포기시 정상화 용의” 밝혀
- ▲2.17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아시아 순방 첫 번째 국가인 일본에서 북한에 미사일 실험을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경고
- ▲2.24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담화, ‘광명성 2호’의 발사준비를 공식발표
- ▲2.25 = 미 국무부, 2008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기록이 여전히 지독하게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
- ▲3.2~10 =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한·중·일 순방했으나 방북은 불발
- ▲3. 6 = 북한군은 이날 열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간 장성급회담에서 미군이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새 미 행정부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응한 강력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3. 9 =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키 리졸브’ 훈련(3.9-20) 관련해 “적들의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그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3.10 = 오바마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와 백악관 회동에서 “대화를 통한 북한 개방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
- ▲3.12 = 오바마 대통령, 방미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계획의 위험성을 경고
- ▲3.17 = 미국 국적의 여기자 2명이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취재 도중 북측에 억류
- ▲3.17 =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이 최근 미국의 추가적인 식량 지원을 거부했다고 밝힘.
- ▲3.24 = 북 외무성 담화, “평화적” 로켓 발사에 대한 “적대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름으로 이뤄진다면 안보리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고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고 경고
- ▲3.31 = 북 조선중앙통신, 북한 당국이 억류한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불법 입국과 적대행위” 혐의를 “확정”해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
- ▲4. 3 = 오바마 대통령,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적인 행위라고 비판하고 발사 중단을 요구
- ▲4. 5 = 북, 장거리 로켓(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 발사
- ▲4. 5 = 오바마 대통령, 북이 ‘인공위성’이라고 한 로켓발사를 ‘미사일’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촉구
- ▲4.14(뉴욕 4.13) = 유엔 안보리 전체 공개회의 열어 미 주도하에 북의 로켓 발사 비난하는 의장성명 공식 채택
 - 북 외무성 성명, 6자회담 불참·핵시설 원상복구 방침 천명



- ▲4.15 =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하며 회담 불참과 핵활동 재개 방침을 천명한 북한에 대해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 ▲4.18= 평양체류 미 국무부 직원 평양 떠나
- ▲4.18 =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남측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는 선전포고” 거듭 주장
- ▲4.22 = 클린턴 미 국무장관,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 ▲4.24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기업 3곳 선정
- ▲4.24 =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미 여기서 “재판 회부하기로 정식 결정” 발표
- ▲4.25 = 북 외무성 대변인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 재처리작업 착수” 발표
- ▲4.29 = 북 외무성 성명, 핵시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경고
- ▲4.30 = 클린턴 미 국무장관, 북한에 대해 스스로 더욱더 깊은 무덤을 파고 있다면서 강력 비판
- ▲5. 1 = 오바마 대통령, 북한과 이란에 억류 중인 미국 국적 여기자 3명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
- ▲5. 4 = 북 외무성 대변인,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5. 6 = 오바마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파키스탄에 대한 우려를 표명
- ▲5.7~12 = 보즈위스 대표, 한·중·일 순방, 북한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서울 5.8)
- ▲5.8 = 북 외무성 대변인 “대북 적대 美와 대화 무용” 입장 발표
- ▲5.19 = 클린턴 미 국무장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각국 언론에 설명하기 위한 첫 외신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 일절 언급 안 함
- ▲5.25 = 북, 2차 핵실험 감행
- ▲5.25 = 오바마 대통령,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성명 발표
- ▲5.25 = 오바마 대통령, 한국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발표한 것을 환영
- ▲5.27 =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성명, 남측의 PSI 전면 참여가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며 서해상에서 한·미군의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
- ▲5.27 =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백악관 대변인, 북의 2차 핵실험 실시 및 영변 재처리시설 재가동 움직임과 관련, 북한이 스스로 고립을 심화시키고 이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 ▲5.28 = 백악관 대변인, 북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의 국제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항공기, 선박 운항 제한 등을 추진 중임을 확인
- ▲5.30 =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오바마 대북관계 희망 갖고 있지만 순진하지만은 않아” 발언
- ▲5.31~6.5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미국 정부 합동대표단, 한·중·일순방해 북핵 문제 관련 대북 제재 협의
- ▲6.2 = 미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8명,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전달
- ▲6. 3 = 오바마 대통령, 중국 후진타오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
- ▲6. 6 = 오바마 대통령,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보상으로 답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
- ▲6. 6 = 미 국방부 대변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 수정 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은 일단 배제
- ▲6. 7 = 클린턴 국무장관, 미 ABC방송에 출연해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직접 요구하는 서한을 북한에 보냈으며 응답을 받았다고 밝힘
- ▲6. 8 = 북 중앙재판소, 억류 중인 미 여기자 2명에게 ‘조선민족적대죄’ 등을 적용, 각각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 ▲6. 8 = 클린턴 국무장관, 북한이 미국인 여기자들에게 온정적인 조치를 베풀어 이들을 추방해주길 희망한다며 인도적 견지에서 즉각적인 석방을 거듭 촉구
- ▲6. 8 = 미 백악관 부대변인,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미국 여기자 2명에게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 ▲6. 8 = 미 국방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추가적인 방어적 조치들을 강구 중”이라고 언급
- ▲6.13(뉴욕 6.12) = 유엔 안보리, 북의 2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 초강경 대북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
- ▲6.13 = 북 외무성 성명,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874호에 대응해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조치를 선언

sungjin@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6/14/0511000000AKR20090614017700014.HTML>